

After 5.18

운동과 사상의 5.18

5.18민중항쟁 제41주년기념 학술회의

After 5.18

운동과 사상의 5.18

After 5.18: Social Movements and Political Thoughts

※ 본 자료집은 2021년 5월 26일 학술회의의 발표문 참고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완성된 행사 자료집은 차후 제작될 예정입니다.

2021

5.18민중항쟁 제41주년기념 학술회의

After 5.18: 운동과 사상의 5.18

일시: 2021년 5월 26일(수), 14:00~18:00

장소: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주관: 현대정치철학연구회

주최: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김대중평화센터

후원: 서울시

개회사

최수동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회장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

1부 운동의 5.18

○ 5.18 이후 한국의 과거청산

사회: 김정한 (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발표: 정원옥 (문화과학), “5.18 이후 한국의 과거청산과 사회적 기억”

토론: 이유재 (튀빙겐대 한국학연구소)

○ 5.18 이후 한국 학생운동과 일본 사회운동

사회: 정정훈 (서울과기대)

발표: 아오키 요시유키 (도쿄대), “학생운동 속의 ‘광주’에 대한 기억”

토론: 김원 (한국학중앙연구원)

○ 5.18과 홍콩항쟁

사회: 장대업 (서강대)

발표: 에릭 라이 (런던대 동양아프리카연구대학),

“홍콩 반권위주의 운동의 연대와 회복탄력성: 교훈과 전망”

토론: 홍명교 (플랫폼C)

2부 사상의 5.18

○ 5.18과 우리의 혁명 (종합토론)

사회: 김정한 (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지정 토론: 진태원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양창렬 (현대정치철학연구회)

차례

9 발표자 소개

발표문 1

13 정원옥, “5.18 이후 한국의 과거청산과 사회적 기억”

※ 토론문 1 별지 참조

발표문 2

37 아오키 요시유키, “학생운동 속의 ‘광주’에 대한 기억”

※ 토론문 2 별지 참조

발표문 3

55 에릭 라이,

“홍콩 반권위주의 운동의 연대와 회복탄력성: 교훈과 전망”

발표문 3 원문

69 Eric Lai, “Solidarity and Resilience of Hong Kong's Anti-authoritarian Movement: Lessons and Prospects”

토론문 3

87 홍명교, “홍콩 항쟁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발표자 소개

1부 운동의 5.18

○ 5.18 이후 한국의 과거청산과 사회적 기억 (발표자: 정원옥)

- 사회: 김정한 (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강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대중운동의 이데올로기 연구: 5.18 광주항쟁과 6.4 천안문운동의 비교』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실천문학』 편집위원, 『문화과학』 편집위원,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민간조사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현대정치철학연구회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사회운동과 정치철학의 마주침’을 연구 주제로 삼아 최근에는 증언과 증인, 기억의 정치에 관해 공부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대중과 폭력: 1991년 5월의 기억』, 『1980 대중 봉기의 민주주의』(제7회 일곡유인호학술상 수상), 『알튀세르 효과』(공저), 『너와 나의 5.18』(공저), 『한국현대생활문화사 1980년대』(공저), *The History of Social Movements in Global Perspective*(공저), *Korean Memories and Psycho-Historical Fragmentation*(공저), *Toward Democracy: South Korean Culture and Society, 1945-1980*(공저, 근간) 등이 있으며. 국역서로 『폭력의 세기』, 『혁명가: 역사의 전복자들』(공역)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 「5.18 항쟁 시기에 일어난 일가족 살인 사건: 전쟁, 학살, 기억」, 「5.18 학살 이후의 미사(未死): 아직 죽지 못한 삶들」, 「광주학살의 내재성: 쿠데타, 베트남전쟁, 내전」 등이 있다.

- 발표: 정원옥 (문화과학 편집위원)

박사학위논문으로 『국가폭력에 의한 의문사 사건과 애도의 정치』를 썼다. 의문사 유가족 구술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사회적 문화적 실천으로서 과거청산의 과제를 확장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과거청산을 사회적 의제로 사유하기”라는 주제로 2019년, 2020년 토론회를 기획, 진행하였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 재직 중이며, 『문화과학』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토론: 이유재 (독일 튀빙겐대 한국학연구소 소장)

베를린 자유대학교,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역사, 철학, 정치학, 한국학을 공부했다. 독일 에어푸르트대학 역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독일 튀빙겐대학교 한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튀빙겐대 한국학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일상사란 무엇인가』(공역, 2002), 『일상사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공편, 2006),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1950년대』(공저, 2016), *Koloniale Zivilgemeinschaft*(2017), *Glueck auf! Lebensgeschichten koreanischer Bergarbeiter in Deutschland*(2021) 등을 썼다.

○ 학생운동 속의 ‘광주’에 대한 기억 (발표자: 아오키 요시유키)

- 사회: 정정훈 (서울과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계간 『문화과학』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인권과 인권들』, 『군주론, 운명을 넘어서는 역량의 정치학』이 있고, 함께 쓴 책으로는 『코뮌주의 선언』, 『불온한 인문학』, 『소수성의 정치학』, 『맑스를 읽자』, 『휘말림의 정치학』 등이 있다.

- 발표: 아오키 요시유키 (일본 도쿄대 박사 수료)

일본 도쿄대학 박사과정(Area Studies)을 수료한 후 독교(獨協)대학에서 한국 민주화운동과 저항문화에 대한 수업을 맡고 있다. 연구 분야는 한국지역학과 사회운동론이며 지금은 억압과 투쟁 전술의 관계라는 이론적인 관심과 더불어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에서 왜 특정한 운동에 대한 기억만이 잊혀지는지에 관해 관심을 두고 있다.

- 토론: 김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사회학부 정치학과 교수, 근현대구술사, 동아시아 기억연구, 현대사 연구자.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집위원, 계간 실천문학 편집위원. 현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주요 저서로는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 『1970 박정희 모더니즘』(공저), 『정치의 임계』(공저) 등이 있다.

○ 홍콩 반권위주의 운동의 연대와 회복력: 교훈과 전망 (발표자: 에릭 라이)

- 사회: 장대업 (서강대)

장대업 교수는 2015년부터 서강대 국제한국학과에서 한국의 개발과 정치경제를 가르치고 있다. 국제한국학과에 자리잡기 전에는 영국 런던대학교의 아시아 아프리카 대학 (SOAS)의 개발학과에서 부교수로 재직하며 동아시아 발전과 개발, 노동, 이주, 국가이론, 정치경제학을 가르쳤다. 그는 서강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후 영국 워릭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와 박사를 수여 받았으며 그 후 홍콩에서 비정부기구 Asia Monitor Resource Centre의 연구주임, 홍콩대학의 아시아센터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제직하였고 홍콩 성시대학에서 강의하였다. 개발, 이주, 노동, 국가에 관련된 저서와 논문들은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등에 실려 있으며 대표작으로 *Capitalist Development in Korea: Labour, Capital and the Myth of Development State* (2009, London: Routledge)이 있다. 현재는 한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이 아시아 극빈국의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이주, 투자, 원조의 세 가지 각도에서 고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발표: Eric Lai (영국 SOAS, University of London)

에릭 라이(Eric Lai)는 홍콩 조지타운 법률센터의 법률연구원이다. 그는 또한 런던 SOAS 대학의 법학 박사과정 중이기도 하다. 그는 민간인권전선(Civil Human Rights Front)의 고문이자 홍콩 선거 관찰 프로젝트의 창립 멤버였다. 그의 연구는 홍콩의 법과 사회 운동과 함께 법정책을 연구한다. 그의 최근 학술 간행물들은 홍콩에서의 지도자 없는 운동의 이론적 함의와 사회 운동에서 기독교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 토론: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학과 졸업.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부, 사회진보연대, 한국진보네트워크 '진보넷' 기술팀 등에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사회운동 단체 "플랫폼C"에서 동아시아 사회운동 뉴스레터 편집국장을 맡아 활동 중이다.

2부 사상의 5.18

○ 5.18과 우리의 혁명

- 사회: 김정한 (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 지정 토론: 진태원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세대 철학과와 동 대학원 철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에서 스피노자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고, 『황해문화』 편집위원으로 있다. 저서로는 『애도의 애도를 위하여』, 『을의 민주주의』, 『알튀세르 효과』(편저), 『스피노자의 귀환』(공편), 『포퓰리즘과 민주주의』(편저) 등이 있으며, 자크 데리다의 『법의 힘』, 『마르크스의 유령들』, 에티엔 발리바르의 『스피노자와 정치』, 『우리, 유럽의 시민들?』, 『폭력과 시민다움』, 피에르 마슈레의 『헤겔 또는 스피노자』, 자크 랑시에르의 『불화: 정치와 철학』, 알튀세르의 『알튀세르의 정치철학 강의』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스피노자 철학을 비롯한 서양 근대철학을 연구하고 있고, 현대 프랑스철학과 정치철학, 한국 민주주의론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 지정 토론: 양창렬 (현대정치철학연구회)

파리1대학 박사수료, 현대정치철학연구회. 고대 원자론 및 현대 정치철학을 연구하며 글을 쓰거나 책을 번역하고 있다. 『알튀세르 효과』(2011), 『현대 정치철학의 모험』(2010) 등을 공저했으며, 자크 랑시에르의 『평등의 방법』(근간), 『해방된 관객』(2016), 『무지한 스승』(개정판/2016),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개정판/2013)를 번역했다.

5.18 이후 한국의 과거청산과 사회적 기억

정원옥
(문화과학)

1. 5.18 이후 한국 과거청산 진단

한국의 과거청산은 1988년 4월의 ‘광주청문회’를 그 시작으로 본다면, 3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로는 수많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설립되어 조사 활동을 벌였다. 현재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회’,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등이 활동 중이다.

경험적으로 보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입법청원 운동 과정에서 가장 높다.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피해자들이 목숨을 거는 투쟁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 제정과 함께 진상조사위원회가 설립되면 사회적 관심은 급격히 줄어들고,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될 즈음에는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다.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와 함께 과거사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가 과거청산의 마무리는 아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그것으로 과거청산은 중단되곤 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권고한 후속 조치들이 이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국가의 인정을 받은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전을 치러야 하고,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다시 거리로 나설 채비를 해야 한다. 과거청산은 또다시 피해자

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과거청산에서 반복되어온 풍경이다.

항간에서는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국가기구에 의한 마지막 과거사 조사가 될 것이라고 한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면 한국의 과거청산도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일까.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우려는 성급한 것일 수 있다. 또다시 경험적으로 본다면,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다면, 과거청산은 아마도 마무리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고령에 이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들의 목소리가 국가와 사회에 들리기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지 알 수 없다. 이런저런 이유로 피해자들이 더 나서기 어렵다면 어쩌면 한국의 과거청산은 마무리될 수도 있다.

이렇듯 피해자들의 호소에서 시작되어 피해자들의 희비로 마무리되는 과거청산 방식을 이재승은 ‘신원(伸冤) 모델’이라고 불렀다.¹⁾ 신원모델이란, 피해자들을 무마하고 기념사업을 벌이는데 치중하는 낮은 수준의 정의를 구현하는 모델로 한국의 과거청산 방식을 특징짓는 명명이다. 한국의 과거청산이 이렇듯 낮은 수준의 정의를 구현하는 모델로 진행되어왔기에 30여년이라는 시간이 투여되었음에도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행기 정의의 목표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진실 규명과 정의의 실현, 제도의 개혁을 통해 평화와 민주주의, 화해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사건의 재발을 막는 데 있다고 할 때,²⁾ 한국의 과거청산은 여러

1) 이재승은 과거청산의 모델을 정의모델, 진실화해모델(truth-reconciliation model), 혼합모델(hybrid model), 망각모델, 신원 모델 등 5가지로 구분하며, 한국의 과거청산은 신원모델이라고 규정한다(이재승, 『국가범죄』, 알피, 2010, 31~37쪽). 한편 이영재는 5월운동의 과거청산은 정의모델에 속한다고 보았고(이영재, 「과거청산과 민주주의」, 5.18기념재단 편, 『5·18민중항쟁과 법학』, 2006), 정근식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문제를 주로 다룬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 모델을 택했다고 본다(정근식, 「5월운동의 성과와 한계: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 사이에서」, 『경제와 사회』 126, 2020, 33쪽).

2) UN Peacebuilding Commission, “What is Transitional Justice?: A Backgrounder.” 20 Feb. 2008.

의미 있는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 외에 피해구제와 제도 개혁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³⁾

그런데, 이러한 평가를 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 과거청산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수준은 사건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이름이 있는 사건들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수준과 “과거사정리”로⁴⁾ 포괄되는 사건들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수준은 매우 다르다. 가령, ‘5.18민주화운동’과 ‘4.3사건’, ‘부마민주항쟁’과 같이 이름이 있는 사건들은 특별법 등의 법률에 따라 과거청산이 추진되는 만큼 명예 회복과 피해보상, 기념사업 등의 후속 조치들이 취해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온갖 유형의 국가범죄를 모아 ‘과거사정리’⁵⁾라는 이름으로 포괄하여 조사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경우 진상조사 외에 후속 조치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원모델’이라고 하기에다 미흡하고, ‘진실·화해

3) 한국 과거청산에서는 ‘이행기 정의’와 ‘과거청산’은 혼용되어 사용되어왔다. 이재승에 따르면, 이행기 정의는 대체로 국가폭력과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정치적·도덕적·법률적 원칙이나 요청(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구제, 제도개혁, 법의 지배, 관행과 습성의 변형, 사회정의, 평화 형성, 기억사업)을 가리킨다(이재승, 「이행기 정의와 이행기 정치」,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과거청산과 시민의 정치적 책임』, 2020. 11. 28. 6쪽.). 이영재는 정의관의 관점에서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가 같은 목표를 가진 것으로 본다. 그리고 “과거청산과 관련한 이행기 정의는 정치사회적 조건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과거청산 모델로 관철된다. 대표적으로 ‘정의모델’(보복적 정의), ‘진실화해모델’(화해적·회복적 정의), ‘배상모델’(배상적 정의)이 그것이다”(이영재, 「이행기 정의의 본질과 형태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12-1, 2012, 136쪽.).

4) ‘과거사정리’라는 용어는 과거사의 과제가 너무 많고 복잡하니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포괄적 정리’라는 발언에서 명명된 것으로 추측된다.

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에서는 진실규명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1.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해외동포사, 3. 한국전쟁 전후 시기의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 사건, 4. 권위주의 통치 시기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5. 대한민국의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이다.

모델'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또한 한국의 과거청산을 평가할 때는 5.18이 갖는 특별한 지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근식은 5.18 40주년을 맞이하며 쓴 「5월운동의 성과와 한계」에서 5월운동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5월운동은 5.18특별법 제정을 통한 저항권의 인정과 과거청산 문화의 제도화, 다양한 문화운동을 통한 한국사회 (운동)문화의 혁신, 구술사의 발전, 인권도시 모델의 정립과 확산, 트라우마 치유의 제도화, 5.18기록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지정을 통한 문화적 유산 개념의 발전 등의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5월운동이 직면했던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로서의 지역주의와 이분법적 이념 갈등의 굴레를 생각한다면, 그 성취는 과소평가될 수 없다.”⁶⁾

단정하여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5월운동이 이뤄낸 성과들은 다른 과거청산운동들에서는 대부분 성취해본 적이 없는 것이다. 거의 모든 과거청산운동들이 5월운동의 경로, 이른바 ‘광주문제해결 5원칙’⁷⁾을 착실히 따라가기는 했으나 5월운동이 이룬 성취에는 도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언급을 하는 이유는 5월운동의 과거청산이 이뤄낸 성취를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다. 5월운동이 대표적인 과거청산운동이기는 해도 한국 과거청산의 현주소를 대표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을 호소해온 피해자들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종료와 함께 과거청산이 중단된 지 10년 만에야 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제야 겨우 피해구제와 ‘화해 조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된 처지다.⁸⁾

6) 정근식, 「5월운동의 성과와 한계」, 『경제와사회』 126, 2020, 37쪽.

7) ‘광주문제해결 5원칙’이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 회복, 배상, 정신 계승의 원칙을 말한다.

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34조~제40조까지는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제34조는 화해를 위한 조치들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하고, 제35조에서는 이 법에 의해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제36조에서는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명시하고, 제37조에서는 특별사면과 복권의 건의가 피해자 권리임을 분명히 한다. 제38조에서는 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39조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유족 간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

전체적으로 본다면, 5.18 이후 한국 과거청산의 현주소는 여전히 ‘화해’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진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화해의 조건은 국가 주도의 과거청산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재승은 “국가범죄나 국가책임은 사회 전체가 집단적 폭력과 인권침해의 배후로 작동해왔던 사태를 충실히 해명하지 못한다. 국가범죄에 대한 사회 전체의 책임을 규명하고 그 책임 이행을 강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맥락에서 소시오사이드(socio-cide)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⁹⁾ 소시오사이드는 국가폭력의 재발을 방지하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시민사회의 정치를 상상할 때 매우 유용한 개념이다.

과거청산 노력이 30여 년을 넘긴 현시점은 국가책임 못지않게 사회책임의 문제를 짚어볼 때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사회적 기억’을 재구성하는 담론적·문화적 실천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적 기억을 재구성하려는 담론적·문화적 실천은 과거청산 이전에만 ‘기억의 정치’로 요청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청산이 진행 중인 동안, 그리고 과거청산 이후 더 절실하게 요청되는 작업일 수 있다.

하지만, 국가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기억을 재구성하려는 담론적·문화적 실천 노력은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하여 몇몇 사건들을 제외한다면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글은 ‘사회적 기억’이라는 관점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의 증언을 수집한 구술사 사례를 조사하고 목록화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사회적 기억을 재구성하는 담론적·문화적 실천이야말로 지속

도록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0조에서는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고 ① 위령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관리, ② 추가 진상조사 사업의 지원, ③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 학술 활동의 지원 등의 사업을 담당할 것을 명시하였다.

9) 이재승이 제안하는 소시오사이드는 다의적이다. 첫째, 집단살해나 인권침해에 비국가적 사회적 행위자들이 구체적인 범법자로서 가담하는 맥락이다. 둘째, 집단살해와 인권침해가 정치적·군사적 사유와 다른 사회문화적 사유에 입각해 자행된다는 측면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폭력의 정당화 기반으로 집합의식에 관한 것이다(이재승, 『소시오사이드 또는 연대의 정치』, 의문사진상규명 30주년 기념 현대정치철학연구회·과거사연구자모임 공동주최 오픈 세미나 자료집, 『과거청산을 사회적 의제로 사유하기』, 2019. 11. 13. 7~8쪽.).

가능한 화해와 공동체 회복의 조건들을 만드는 시민 개개인의 정치적 책임
임을 강조할 것이다.

2. 사회적 기억에 관한 연구

국가폭력 경험을 다룬 구술 사례의 조사 및 목록화 작업을 하기 전에
사회적 기억에 관한 연구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억이란 무
엇인지, 사회적 기억이라는 관점을 동원하는 학문적 전략이 무엇인지를 환
기해야 과거청산에서 기억 실천이 갖는 중요성을 더 명확히 제시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억에 관한 연구는 기억사회학, 구술사 연구, 기록관리 분야 등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¹⁰⁾

먼저, 기억사회학 분야에서 사회적 기억이라는 용어는 모리스 알박스
(Maurice Halbwachs)가 제시한 ‘집합기억(collective memory)’ 개념으로부터
등장했다. 알박스가 쓴 『기억의 사회적 틀』(1925)이 최초의 기억사회학 관
련 저술이라면, 『집합기억』(1950)은 기억사회학의 입론을 완성한 저술이라
고 할 수 있다. 알박스는 기억은 ‘사회적 틀’을 통해 획득·인지·배치되는
집합적-사회적 현상이라고 보았다. 개인들이 기억을 획득하고 배치하고 되
살릴 수 있는 것은 사회집단 내 타인들과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다. 또한 과거는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토대로 재구성되는 것일 뿐
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억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합적이
고 사회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¹¹⁾

10) 필자는 2020년 11월~2021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주하고 중앙대학교 산학협력
단이 수행한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미발간)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고, 이 글의 2장과 3장은 이 연구에서 본
인이 조사한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

11) 김영범,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기억사회학 연구」, 『사회과학연구』
6-3, 1999, 591쪽.

에드워드 카시(Edward Casey)는 사회적 기억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정의한다. 그는 인간의 기억을 개인적, 사회적, 집합적, 공공적 기억으로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기억은 친족이나 이웃, 도시, 지역 등 이미 존재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기억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집합적 기억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대사건에 대해 갖는 기억으로 정의하였다. 즉, 사회적 기억은 공유된 경험이나 역사, 장소, 프로젝트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반면, 집합적 기억은 그런 공통의 기반이 없이 주어진 인구 모두에게 분배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공공적 기억은 개방적 토론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정의하고, 공적 장소나 공적 현존(presence), 공적 토론, 공통의 화제(topic), 장소적 기념 등의 요소를 가진다고 보았다.¹²⁾

국내 사회과학에서는 집합기억과 사회적 기억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권기숙은 Paez, Basabe, Gonzalez가 정의한 바에 따라¹³⁾ 집합 기억과 사회적 기억을 구별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집합 기억”이 “한 사회의 기억”(memory of society)라고 본다면, 사회적 기억은 “사회 내의 기억”(memory in society)이다. 사회적 기억이란 기억이 형성되는 사회적 과정으로 기억이 실천되는 장으로 볼 수 있다. 기억들이 형성되고 여러 기억들이 갈등하고 혼재하는 기억들의 장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억은 다중적이고 일시적이고 컨텍스트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¹⁴⁾ 또한 개인의 기억은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억이다. “기억이란 물론 한 개인의 두뇌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기억이 형성되

12) Casey, E. S. 2004. Public Memory in Place and Time, in K. R. Phillips ed., *Framing Public Memory*, Tuscaloosa: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정근식. 2013.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억 연구의 궤적: 다중적 이행과 지구사적 맥락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13-2. 349쪽 재인용.

13) Paez, Dario, Nekane Basabe and Jose L. Gonzalez, 1997. “Social Process and Collective Memory.” in *Collective Memory of Political Events*, ed., by Pennebaker, James, Dario Paez, and Bernard Rim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14) 권기숙, 「제주 4.3의 사회적 기억」, 『한국사회학』 35-5, 2001, 205쪽.

고 변화되는 과정에서 사회나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 국가에 의해 왜곡된 기억을 강요받기도 받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특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회고 시점의 상황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성격을 띠게 된다.”¹⁵⁾

기억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의 사회적 기억은 역사적 기억 또는 관제 기억에 대항하여 진실을 찾고자 하는 기억 투쟁, 대항 기억 형성을 위한 담론적 실천으로 이어졌다. 5.18항쟁과 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운동은 관제 기억에 맞서 진실을 회복하고자 하는 기억 투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문화적 재현 운동의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5.18의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은 항쟁 직후에는 시, 노래, 판화 등의 짧고 단순하지만 직관적인 매체들로 ‘광주’에 대해 표현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소설, 연극, 영상 다큐멘터리로 확장되면서 문자 매체를 통한 재현을 넘어 시각적 영상매체를 통한 재현으로 나아갔다. 정근식은 5.18 영상이 “광주항쟁의 기억을 상기시킴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에너지를 이끌어내고 명예회복과 기념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5월 운동이 거둔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라고 평가한 바 있다.¹⁶⁾

4.3의 경우에도 기억 투쟁은 문화적 재현 운동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김영범에 따르면, “4.3운동의 문화적 재현 운동은 결과적으로 청산 대상 과거사에 대한 새로운 집합기억의 형성, 새로운 역사의 구성·창출로 나아가는 길목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한 집단/공동체/사회가 역사적 진실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낡은 이데올로기적 기억으로부터 ‘신생의 기억=대항기억’으로서의 이전, 단순한 수평 이동이 아니라 극적인 비상과 초월로서의 이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그려볼 수도 있다.”¹⁷⁾

한편, 구술사는 역사를 다시 쓴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기억의 문제에 접

15) 권귀숙, 『기억의 정치: 대량학살의 사회적 기억과 역사적 진실』, 문학과 지성사, 2006.

16) 정근식, 「항쟁의 기억과 영상적 재현」, 『민주주의와 인권』 3-2, 2003, 105~106쪽.

17) 김영범, 「기억에서 대항기억으로, 혹은 역사적 진시르이 회복: 기억투쟁으로서의 43문화운동 서설」, 『민주주의와 인권』 3-2, 2003, 100쪽.

근한다.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대표적인 구술사가인 폴 톰슨에 따르면, “밑바닥으로부터 새로운 증거를 도입하고, 초점을 이동시키고, 연구의 새로운 영역을 열고, 역사가들의 가정과 이미 인정된 해석에 도전하고, 무시되었던 실제적인 집단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역사서술 자체의 폭을 넓히고 풍성하게 한다. 다시 말해, 역사는 구술사를 통해 더 민주적이 된다는 것이다.”¹⁸⁾ 윤택림은 한국 구술사에서는 톰슨과 같이 경험주의적 접근을 하는 구술사 연구가 더 많다고 진단한다. “이는 실증주의 역사학과 경험주의적 사회과학의 영향으로 구술자료를 경험적인 자료로서, 다름의 증거로서, 새로운 역사 쓰기를 위한 근거로서 다루기 때문이다.”¹⁹⁾

한국에서 구술사는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치유의 역사학’이자 ‘새로운 민중사’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술사는 “거대서사와 엘리트 중심의 역사에서 배제되었던 하위주체의 경험을 역사화 시키며, 민중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지배 이데올로기의 단순화· 획일화에 도전하고, 저항적 지식생산을 넘어 공감과 치유의 역사학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적 역사 쓰기 방법론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²⁰⁾

한국 구술사의 또 하나의 두드러진 경향은 구술사가 여성주의 인식론과 접목되면서 여성주의 역사 쓰기의 가능성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주의 인식론은 실증주의적 객관성을 지양하고, 지식이 상황적이며 부분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지식에서 여성의 경험을 중시하며, 지식의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을 비판하고 간주관성을 강조하는데, 여성주의 인식론의 이러한 관점이 연구 방법으로서 구술사와 친화성을 갖기 때문이다.²¹⁾

구술사가 여성주의 인식론과 접목되면서 여성주의 역사 쓰기가 활발하

18) Thompson, Paul. 2000. “1. History and Community” in *The Voice of the Past: Oral History*(3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P. 24; 윤택림 편역,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아르케, 2010, 11쪽 재인용.

19) 윤택림 편역, 위의 책, 15쪽.

20) 이용기, 「‘새로운 민중사의 모색과 구술사 방법론의 활용」, 『역사문화연구』 37, 2016, 426쪽.

21) 이재경·윤택림·이나영 외, 『여성주의 역사쓰기: 구술사 연구방법』, 2012, 14쪽.

다. 일본군 위안부의 목소리, 한국전쟁 경험,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 등의 여성 경험, 여성 노동자, 여성 활동가, 기지촌 여성 및 성매매 십 대 여성, 성 소수자 등 한국 사회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다양한 영역의 여성 경험을 역사화 하는 한편, 젠더 경험의 공감을 통한 정치적 연대를 시도한다.

김영희는 국가폭력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5.18의 서사에서 “여성’들은 훼손된 신체 이미지를 통해 ‘국가폭력’을 고발하고 증명하는 장소로 동원되거나 ‘대동(大同)’의 정신을 구현하는 저항공동체의 표상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특정 젠더 역할 규범에 고착되거나 파편적인 이미지를 재현하는 대상으로 가시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항쟁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구술은 이와는 다른 결의 서사를 제시함으로써 ‘5.18 광주’의 서사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입체화하고 있다”라며 여성주의와 구술사의 만남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²²⁾

마지막으로, 기록 분야에서는 사회적 기억이라는 용어보다는 ‘사회적 기록’, ‘사회적 기억을 내포한 기록’이라는 용어를 주로 쓴다. 윤은하·김유승은 사회적 기록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꼽는다. 첫째, 사회적 기록은 공공기록과 달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생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기록은 사회적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 사건의 진행 중에, 혹은 그 경험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둘째, 사회적 기억이 집단과 시대에 따라 변하듯이, 사회적 기록도 시공의 다양성, 주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이들이 생산한 기록의 고유성 또한 그대로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억을 증거하는 다양한 기록들은 하나의 사건을 증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사회적 기억을 다루는 기록은 단순히 민간 기록의 다양성 차원에서 언급되기 보다는 다양한 기억을 가진 기억 주체들의 인식론적 차이, 기억 주체의 변화에 따른 기록 생산 메커니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²³⁾

기록관리 분야에서 사회적 기록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은 4.16

22) 김영희, 「5.18 기억서사와 여성의 목소리」, 『페미니즘 연구』 18-2, 2018, 155쪽.

23) 윤은하·김유승, 「노근리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기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2, 2016, 62~64쪽.

세월호 참사 이후라고 할 것이다. 4.16 세월호참사의 충격이 한국 사회를 뒤흔든 이후 기록관리 분야에서도 재난 참사를 비롯하여 사회적 갈등 현장을 기록하려는 담론적 실천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기록학에서는 구술을 동시대의 주요 사건을 기록하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본다. 즉,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은 전 세계적으로도 국민들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를 기록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가 구술 아카이브 구축이다. 갑작스레 발생하는 재난의 특성상 기록이 많이 남겨지지 않고, 추모기록을 비롯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사람들이 들려주는 구술은 사건의 실체에 다가서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²⁴⁾

남미숙·유승호는 사회적 기억을 기록해야 할 아키비스트의 책무를 강조한다. 즉, “자본의 리듬에 역행하며 파리 뒷골목의 기억을 수집하는 플라뇌르적 시선으로 밀양 할매들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은 이 시대를 기록해야 할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책임이며, 이는 일상에 스며들었던 폭력을 기억하고 시대를 해독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²⁵⁾

살펴보았듯이, 기억사회학, 구술사 연구, 기록 분야는 사회적 기억의 문제에 접근하는 학문적 관심과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피해자의 경험과 기억을 듣고 기록함으로써 공식 기억, 역사에 대항해 사회적 기억을 재구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전략을 같이 한다. 사회적 기억에 관한 연구는 여성주의 역사 쓰기, 사회적 참사의 기록 등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이행기 정의의 실현과 경로를 함께 해왔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은 사회적 기억을 재구성하려는 담론적 실천이 이행기 정의의 실현과 동일한 맥락에 놓여 있음을 다음과 같이 통찰한 바 있다. “한국에서 기억 담론의 사회적 쟁점화와 학문적 의제화는 명백히 정치 사회적 민주화

24) 송주형, 「구술을 통한 재난 사고의 기록화: 세월호 참사 관련 구술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4, 2015, 188쪽.

25) 남미숙·유승호, 「사회적 기억과 플라뇌르적 시선: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3-1, 2019, 59쪽, 87쪽.

와 이행기 정의의 실현이라는 맥락에 놓여 있었다.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억의 문제는 3중적 이행, 즉 탈권위주의, 탈냉전, 탈식민의 맥락에서 부상한 것으로, 시민사회로부터 기존의 공식적 기억에 대한 대항기억이 출현하고, 국가에 의해 수용되는 경로를 밟았다.”²⁶⁾

이행기 정의는 압제가 종식된 이후 과거에 발생한 비극적 사건들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의 요구로부터 실현되는 것이다. 국가가 스스로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경험과 기억을 사회적 기억으로 재구성하려는 끈질긴 담론적·문화적 실천이 국가가 과거청산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촉구하고 압박하는 역할을 한다.

3. 구술사 사례 조사 및 목록화

국가폭력 피해자의 증언을 수집한 구술사 사례를 시대별로 분류하면, 일제강점기 군 ‘위안부’ 및 강제 동원 관련 피해자 구술, 4.3사건 피해자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유족의 구술, 5.18민주화운동 관련 구술, 사회시설폭력 사건 관련 구술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①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 동원 피해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1990년대 초반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와 강제 연행의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구술 채록을 시작하였다. 그 성과로 1993~1999년 『강제로 끌려간 군위안부들』이라는 구술증언집 1~3권이 발간되었고, 2001년에는 『강제로 끌려간 군위안부들 4: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가 발간되었다.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1~2권)

26) 정근식,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억 연구의 궤적: 다중적 이행과 지구사적 맥락」, 『민주주의와 인권』 13-2, 2013, 387쪽.

까지 모두 7권의 구술 증언집에 93명의 할머니²⁷⁾가 증언자로 참여하였다.

『강제로 끌려간 군위안부들 4: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는 『강제로 끌려간 군위안부들』 1~3권에 수록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위원회 증언팀이 구성되었다. 이 증언집은 이전의 증언집들과는 몇 가지 새로운 접근을 취한다. 우선 ‘군 위안부로서의 체험’을 위안소에서의 경험에 국한하지 않고, 생존자의 전 생애에 걸친 것으로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위안부’로서의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충실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생존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온 삶의 전 궤적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책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체험에 대하여 증언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주목했다. 이러한 접근은 증언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표현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이며, 증언자의 복합적인 주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가 쓴 『빼앗긴 어버이를 그리며』(2017)는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에 강제 동원되어 희생당한 피해자의 유족 23인²⁸⁾의 삶과 이야기를 다룬 증언집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증언집이 증언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쓰는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저자들은 오랜 시간 유족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기

27) 『강제로 끌려간 군위안부들』 1~3권의 증언자는 김학순, 김덕진, 이영숙, 하영숙, 하순녀, 오오목, 황금주, 문필기, 이용수, 이옥분, 문옥주, 이순옥, 이상옥, 이득남, 이용녀, 김태선, 박순애, 최명순, 강덕경, 윤두리, 진경평, 박두리, 강무자(가명), 손판임, 김복동, 김분신, 박연이(가명), 김춘자, 배죽간, 최일례, 박순이(가명), 김은진(가명), 훈 할머니, 김소란, 김군자, 김옥주, 김은례, 심달연, 조순덕, 최화선, 황순이, 김끝순, 조남례, 하영이, 신현순, 김유감 등이며, 『강제로 끌려간 군위안부들 4: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의 증언자는 김화선, 김창연(가명), 한옥선, 김영자, 최갑순, 정윤희, 윤순만, 김복동, 안법순 등이며,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의 증언자는 홍강림, 홍예진, 하군자, 이봉화, 임금아, 장춘월, 박필연, 역영란, 박말달, 장학수 등이며,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의 증언자는 김순옥, 지돌이, 이광자, 조운옥, 이옥선, 하옥자, 강일출, 문명금, 박옥선, 박서운, 이수단, 이귀녀, 배삼엽, 현병숙, 박우득, 김의경, 박대임 등이다.

28) 강종호, 권수청, 김기호, 김동관, 김문식, 남양강, 남영주, 노재원, 동정남 등이 증언자로 참여하였다.

록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증언자가 언어로 담아내지 못하는 사연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그 마음이 잘못 기록되어선 안 된다는 부담을 안고 작업했고, 증언자는 황망했던 가족들의 삶과 고비마다 무너져 내리던 심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여러 차례 원고를 검토했다. 뼈대만 있던 이야기에 피와 살을 붙이고 증언자들의 마음을 담아 재구성하는 작업을 반복해 책이 완성되었다.²⁹⁾

한편,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 동원 피해자 구술증언집은 정부 기관에서도 발간되었다. 『그 말을 어디다 할꼬: 일본군 ‘위안부’ 증언자료집』은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가 여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것으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⁶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는 일본군 ‘위안부’ 16명의³⁰⁾ 목소리가 담겨 있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서도 『들리나요?: 열두 소녀의 이야기: 일본군위안부 피해 구술기록집』(2013)을 펴냈다.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12명과 피해 할머니를 위해 활동한 인권운동가 1명의 구술자료를 수록하였다. 이 책에는 동원 당시부터 귀국까지의 상황, 귀국 후 생활고와 신체·정신적 후유증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다. 구술자의 연령(출생연도) 이외의 개인 신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편집되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당꼬라고요?: 강제동원 구술기록집 I』(2005)은 정부 차원의 최초의 강제동원 생존자의 구술기록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술기록집의 발간 목적은 생존자들의 구

29) 민족문제연구소. “(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증언집 『뼈앗긴 어버이를 그리며』 출간”. 2017. 6. 29. <https://www.minjok.or.kr/archives/89339>

30) 강순자(가명), 석순희(가명), 정서운, 김말순(가명), 김화자(가명), 공점엽, 노청자, 이옥선, 김봉이(가명), 박송자(가명), 박화자(가명), 김정덕(가명), 김순익, 길원옥, 최용순(가명), 장점둘이 구술자로 증언하였으며, 책임연구원으로 김명혜, 공동연구원으로 권희순, 신혜수, 정현백, 한국염, 연구참여자로 강현주, 김동희, 김미현, 김은경, 나주현, 박정애, 양나운, 오연주, 오지연, 윤미향, 이순영, 진주, 차혜영, 최기자가 참여하였다.

표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술증언 목록

발행년도	저자	자료명	발행처
1993-1999	한국정신대연구소 외 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 2, 3	한울
1995	정신대연구회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한울
2001	한국정신대연구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5	풀빛
200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위원회 증언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 :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풀빛
2003	한국정신대연구소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2	한울
200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여성인권센터 연구팀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	여성과 인권
2005	정근식 편저, 진주 채록	고통의 역사: 원폭의 기억과 증언	선인
2016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일본군'위안부'기록물관리사업팀 편저	문서와 사진, 증언으로 보는 일본군'위안부' 이야기	서울특별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17	김금숙	풀: 살아있는 역사,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증언	보리
2017	민족문제연구소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빼앗긴 어버이를 그리며 : 강제동원피해자 유족 증언집	민연 주식회사
2018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최초의 증언자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술을 통해 노무동원 피해의 다양한 역사상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조사¹⁾과가 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 전국 5개 지역을 다니며 수집한 노무 피해신고자의 생존자 조사 결과 226건 가운데 19명의³¹⁾ 구술기록이 담겨 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노무 동원 피해자 구술기록집 외에 군인 분야에서 『갑자·을축생은 군인에 가야 한다』(2006), 『시베리아 억류 조선인 포로의 기억』(2007), 『굴 따러 군대 갔어!』(2008)라는 3권의 강제 동원 피해자 구술집을 발간했다.

정부 기관들에서 수행한 피해자 조사 및 구술증언집 발간은 구술자료 수집이 목적이라기보다는 피해 사실의 확인과 그에 따른 보상 또는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31) 박용식, 조용섭, 김한중, 장덕환, 장순배, 김광모(이상 큐슈 지역), 이수철, 정대성(이상 관서 지역), 이사형, 경기철, 엄정섭, 박진형, 진현수(이상 관동 지역), 김득중, 박태준, 이무순(이상 중부 지역), 정상균, 최차기, 고복남(이상 일본 외 지역)이 구술하였다.

표 2 정부 기관이 발간한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기록 목록

발행처	자료명	저자	발행년도
여성(가족)부	그 말을 어디다 할꼬:일본군 '위안부' 증언자료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편저	2002
	오키나와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봉기 증언	한국정신대연구소 편저	200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술자료 재정리 자료집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2016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자조사및국외강 제동원희생자등지원 위원회	들리나요?: 열두 소녀의 이야기: 일본군위안부 피해 구술기록집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 회 조사2과	2013
국무총리실 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당꼬라고요?: 강제동원 구술기록집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편저	2005
	검은 대륙으로 끌려간 조선인들 : 강제동원 구술기록집 2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편저	2006
	똑딱선 타고 오다가 바다 귀신될 뻔 했네 : 강제동원 구술기록집 3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편저	2006
	가긴 어딜 가? 현병이 총 들고 지키는데 : 강제동원 구술기록집 4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편저	2006
	“갑자·을축생은 군인을 가야 한다” : 강제동원 구술집 5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편저	2006
	수족만 멀쩡하면 막 가는 거야 : 강제동원 구술기록집 6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편저	2007
	시베리아 억류 조선인 포로의 기억 1 : 강제동원 구술집 7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편저	2007
	지독한 이별: 사할린 이중징용 진상조사 구술기록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편저	2007
	굴 파러 군대 갔어: 강제동원 구술기록집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편저	2008
	아홉 머리 넘어 북해도로 : 홋카이도 강제동원 피해 구술자료집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편저	2009

② 4.3사건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사건 유족

4.3사건 진상규명운동은 학문적 접근과 함께 사건 체험자, 희생자 유족, 군·경·관 관계자, 일본으로 도피했던 남로당 도당 간부와 무장대 가담자 등의 회고 기록 발굴과 증언 채록 작업에 박차가 가해지면서 본격화되었다. 진상규명운동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수집되고 있던 회고담·증언들의 정리와 편집에 의해 증언집이 출간되었는데, 오성찬의 『한라의 통곡소리』와 제주 4.3연구소의 『이제야 말함수다』 1, 2권이 그것이다. 1989년 초부터 제주신문 4.3특별취재반이 구성되어 「4.3의 증언」 연재를 시작하였고, 이 기획연재는 1990년 6월부터 제민일보로 지면이 옮겨져 「4.3은 말한다」³²⁾라는 제목으로 계속되는 가운데 도민들의 4.3 재인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³³⁾

최근 발간된 『4.3과 여성: 그 살아낸 날들의 기록』 (2019)은 허호준이 기록하였고, 8명의³⁴⁾ 구술이 담겨 있다. 이 책은 4.3사건과 그날 이후를 살아내야 했던 제주 여성들의 삶에 관한 기록이다. 구술에 참여한 이들은 1922~1938년생으로 4.3무장봉기가 발발한 1948년을 기준으로 11~27살이었다. 인터뷰에 응한 이들은 모두 4.3희생자 유족들이며, 가족의 죽음 앞에 선 생존자로서 겪어야 했던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됐다. 이들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삶을 살았고, 가족과 마을을 일궈냈는데 구술채록집에 나온 이들의 기록은 왜 여성의 경험과 기억을 채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³⁵⁾

32) 「4.3은 말한다」는 총 5권의 책으로 발간되었다. 제민일보(濟民日報) 4.3 취재반: 1~3권(양조훈·서재철·고홍철·고대경·김종민·강홍균), 4권(김종민·김애자), 5권(김종민), 전예원, 1994~1998.

33) 김영범, 「기억에서 대항기억으로, 혹은 역사적 진실의 회복: 기억투쟁으로서의 4.3 문화운동 서설」, 『민주주의와 인권』 3-2, 2003, 77쪽.

34) 강숙자, 김연심, 박승자, 안봉순, 이문자, 이승례, 최계추가 증언자로 참여하였다.

35) 허호준, 「제주 4.3과 여성의 기억」, 제주4.3연구소 편 『4.3과 여성: 그 살아낸 날들의 기록』, 2019, 12~14쪽, 25쪽.

표 3 4.3사건 피해자 구술증언 목록

발행년도	저자	자료명	발행처
1988	오성찬	한라의 통곡소리: 4.3 제주 대학살의 증언	소나무
1989	제주 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1, 2	한울
1994~1998	제민일보 4.3 특별취재반	4.3은 말한다 전5권	전예원
2002	제주 4.3연구소	무덤에서 살아나온 4.3수형자들	역사비평사
2004	김동만 외	몸에 새긴 역사의 기억	각
2006	권귀숙	기억의 정치: 대량학살의 사회적 기억과 역사적 진실	역사비평사
2009	제주 4.3연구소	그들 속에 4.3	선인
2010	제주 4.3연구소	4.3구술자료총서1: 갈치가 갈치 골랭이 끊어 먹었다 할 수밖에	한그루
2010	제주 4.3연구소	4.3구술자료총서2: 아무리 어려워도 살자고 하면 사는 법	한그루
2011	제주 4.3연구소	4.3구술자료총서3: 산에서도 무섭고 아래서도 무섭고 그냥 살려고만	한그루
2011	제주 4.3연구소	4.3구술자료총서4:지금까지 살아진 것이 용현 거라	한그루
2013	제주 4.3연구소	4.3구술자료총서5: 다시 하귀중학교를 기억하며	한울
2013	제주 4.3연구소	4.3구술자료총서6: 빌레못굴, 그 끝없는 어둠 속에서	한울
2013	제주 4.3연구소	그들 속의 4.3:死, 삶의 기억	선인
2015	제주 4.3연구소	4.3구술자료총서7: 만병디의 눈물	한울
2015	제주 4.3연구소	4.3구술자료총서8: 가리방으로 기억하는 열두살 소녀의 4.3	한울
2019	제주 4.3연구소	4.3생활사총서1: 4.3과 여성, 그 살아낸 날들의 기록	각 Ltd.

한편, 『학살된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2020)은 진주 민간인학살 유족 증언집이다. 진주유족회 증언록편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김주완, 김한규, 한양하, 백은숙, 박성경이 증언채록팀으로 기록하였으며, 유족 17명의³⁶⁾ 증언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이미 70대가 된 민간인학살 희생자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이승만 정권의 보도연맹원 학살의 실상과 유족들의 아픈 삶을 기록했다.

③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구술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는 1988년 5.18 연구를 표방하며 설립되었다. 최정기에 따르면,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가 발간한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1990)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의한 최초의 집단적 말하기라는 의미가 있다. 그것은 5.18에 대한 재평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과거사 문제가 본격적인 쟁점으로 제기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학문적인 수준에서만 보더라도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이하 ‘5월사료전집’)은 우리나라에서 구술사라는 조사 및 연구 방법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 기획하고 이정우가 편집한 『광주, 여성: 그녀들의 가슴에 묻어둔 5.18이야기』(2012)는 5.18을 직접 체험한 여성 19명이³⁷⁾ 자신들의 목소리로 생애사를 담은 구술집이다. 이 구술집은 ‘80년 5월’의 기억뿐만 아니라 5.18을 전후로 한 그녀들의 전 생애를 담고 있다. 전남대학교 병원이 발간한 5.18민주화운동 의료활동집인 『5.18 10일간의 야전병원』(2017)은 5.18 의료 활동에 대해 병원 자체적으로는 처음 발간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당시 의료 활동에 참여했던 의료진 28명의 증언을 담았다.³⁸⁾ 책에는

36) 강병현, 강성현, 김상길, 김순달, 김승일, 김형자, 문병근, 박남숙, 백자야, 이주택, 이증식, 장호수, 장호조, 정병표, 정연조, 정영자, 황양이 등이 증언자로 참여하였다.

37) 김막님, 박수복, 김동심, 광근례, 하문순, 윤청자, 이정희, 전옥주, 박정자, 정순자, 방귀례, 송희성, 오경자, 정숙경, 노영숙, 이현옥, 정순덕, 이귀님, 정미례가 증언자로 참여하였다.

표 4 5.18민주화운동 관련 구술증언 목록

발행년도	저자	자료명	발행처
1985	황석영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작과비평사
1987	5.18광주의거청년동지회	5.18 광주민중항쟁증언록 1	광주
1990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992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	5.18광주민중항쟁 비망록	남풍
1996	광주광역시의회	5.18 의료활동 자료기록 및 증언	광주광역시의회
2001	이상식	역사교수가 겪은 80년 광주 5.18 역사의 증언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2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5.18증언자료 채록사업 결과보고서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3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5.18항쟁 증언자료집 I, II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3	박병기	5.18항쟁 증언자료집 III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4	나간채 · 정근식 · 강창일 편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5	김양현 · 강현정	5.18항쟁 증언자료집 IV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6	정근식 · 나간채 · 박찬식 편	항쟁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	선인
2006	5.18기념재단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	5.18 기념재단
2006	5.18기념재단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1, 2	한얼미디어
2007	5.18기념재단	5.18민중항쟁 증언록 행방불명자 편 : 꽃만 봐도 서럽고 그리운 날들 1, 2	한얼미디어
2008	5.18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	제1차 1980년 5월 전북지역 운동사 구술자료집 : 뜨거운 날들의 투쟁	5.18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
2009	5.18기념재단	2009년 5.18 민주화운동 구술자료 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5.18기념재단
2011	5.18기념재단	2011년 5.18민주화 운동 구술자료 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	5.18기념재단
2010	5.18해남민중항쟁	5.18해남민중항쟁증언록 : 땅끝 해남에서 타오른 오월항쟁	5.18해남민중항쟁 해남동지회
2010	광주여성희망포럼	구술로 엮은 광주 여성의 삶과 5.18	심미안
2010	정시채 외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 4 : 공직자편	5.18기념재단
2012	광주전남여성연합 기획 이정우 편	광주, 여성 : 그녀들의 가슴에 묻어둔 5.18이야기	후마니타스
2017	노성만 외 29명	5.18 10일간의 야전병원 : 전남대학교병원 5.18민주화운동 의료활동집	전남대학교 병원

38) 김신곤, 박영걸, 김현중, 유경연, 정종길, 송은규, 서순팔, 오봉석, 김영진, 박중옥, 조석필, 김승호, 정성수, 조백현, 문응주, 류재광, 유용상, 김안자, 손민자, 김영옥, 이윤민, 이진숙, 윤혜옥, 노은옥, 심재연, 조기학 외 2인이 참여하였다.

병원에 실려 온 참혹한 사상자들의 모습과 계엄군의 병원에 대한 무차별 사격, 밤낮없이 진행되는 응급수술, 시민들의 헌혈대열 등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④ 사회시설 피해 폭력

『숫자가 된 사람들』(2015)은 대한민국판 ‘아우슈비츠’라고 할 수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생존자 11명³⁹⁾의 이야기를 ‘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의 라는 이름으로 모인 6명의 인권기록 활동 저자들이 재구성해낸 구술증언이다. 이 책은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이 ‘사회복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일어났으며, 이 사업을 가능케 한 것이 국가라는 사실을 폭로한다.

『아무도 내게 꿈을 묻지 않았다』(2019)는 진보장애언론을 표방하며 빈곤, 소수자 문제를 당사자 목소리에 기초해 보도하는 언론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마이너가 기획하고, 하금철, 홍은전, 강혜미, 김유미가 글을 쓴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9명⁴⁰⁾의 구술기록집이다. 피해생존자들은 하나같이 선감학원에서 보낸 지난날을 ‘자기 자신을 상실한 시간’으로 기억한다. 기본적으로 인적사항이 완전히 조작돼 호적이 말소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수의 생존자들은 이런 사실조차 퇴소 혹은 탈출 이후 성인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고 한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증언을 기록한 구술사 사례 조사한 이유는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가 피해자들을 증언을 얼마나 기록, 보존, 관리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들은 제각기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목록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서지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집으로 존재하는 경우 자료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다.

필자가 정리한 것이 국가폭력 관련 구술증언 목록의 전부는 아닐 것이

39) 박정보, 김희곤, 하안녕, 황송환, 이상명, 김영덕, 김철웅, 이향직, 최승우, 홍두표, 이해율이 형제복지원 사건의 증언자로 구술하였다.

40) 김성민(가명), 김춘근, 한일영, 이대준, 김성환, 김성곤, 오광석, 현정선, 김장호가 증언자로 구술하였다.

다. 하지만, 이런 정도라도 정리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 동원 피해자 경험,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 경험을 빼고는 국가폭력의 피해 경험을 사회적 기억으로 재구성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연극, 영화, 다큐멘터리, 사진, 미술, 춤 등의 문화적 재현 결과물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억을 재구성하려는 담론적·문화적 실천이 활발했던 사건들의 과거청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의를 실현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사회적 기억을 재구성하는 담론적·문화적 실천은 과거청산의 정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청산이 3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나라에서 몇몇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거의 수집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은 놀랍고 부끄러운 일이다.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의 증언을 담은 『빼앗긴 어버이를 그리며』(2017),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족 증언집인 『학살된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2020), 사회시설폭력 피해자들의 증언을 담은 『숫자가 된 사람들』(2015)과 『아무도 내게 꿈을 묻지 않았다』(2019) 등은 모두 사건 발생 수십 년 만에야 최근에 처음으로 발간된 것이다.

4. 나가며

이 글은 과거청산을 국가책임에서 사회책임으로 접근할 때가 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국가폭력 사건의 문제해결 방식을 국가책임에서 사회책임의 영역으로 이동시키려는 것은 국가 주도 과거청산이 갖는 한계 때문이지, 국가책임이 필요 없다거나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국가는 마땅히 과거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진실 규명과 피해자 배상, 후속 조치 등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재발 방지를 보증할 수 없으며, 사회의 변화를 상상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전진성은 국가 주도의 과거청산과 시민주도의 과거청산/과거 극복은 전혀 다른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한다. 법적 구속력이 국가 주도 과거청산의 강점이자 한계라면, 시민주도의 과거청산/과거극복에서는 ‘인권’이 미래를 위한 역사적 재현이자 정치적 재현/대의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다. 과거는 제거하거나 순치시킬 것이 아니라 끝없는 논쟁과 성찰의 장으로 소환되어야 한다.⁴¹⁾

유사한 관점에서 이재승은 국가폭력 배후로서의 사회를 낱낱이 미분하고 해체하고 재발명해야 국가폭력을 근본적으로 단절시킬 수 있다고 본다. 국가폭력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합당한 최종적인 응답은 반인권적인 집합의식(집합표상)을 해체하는 데 있다. 타락한 집합의식은 결코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개적 변혁(제도 개혁, 기억 작업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순치될 뿐이기 때문이다.⁴²⁾

전진성이 말하는 기억의 윤리, 이재승이 말하는 이행기의 정치는 과거청산에서 방관자였거나 구경꾼이었던 시민을 과거청산의 주체로 세우려는 것이다. 피해를 구제하고 화해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면, 지속 가능한 화해의 조건과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을 만드는 일은 시민 영역의 책임이다. 사회적 기억을 재구성하는 담론적·문화적 실천은 시민 개개인이 과거청산의 주체로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과거청산 과정에서 시민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인권 감수성은 과거사만이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폭력과 차별, 혐오를 단절시킬 수 있는 정치적 역량으로 발휘될 수 있다. 과거청산을 사회적인 의제로 사유하고 실천하는 일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되어야 한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종료되더라도 다시 피해자들만 거리에 서 있게 되는 풍경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사회책임이다.

41) 전진성, 「과거청산의 이론: 이해와 치유의 (불)가능성에 관하여」,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과거청산과 시민의 정치적 책임』, 2020. 11. 28. 28~30쪽.

42) 이재승, 「이행기 정의와 이행기 정치」,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과거청산과 시민의 정치적 책임』, 2020. 11. 28. 21~22쪽.

학생운동 속의 ‘광주’에 대한 기억

아오키 요시유키

(독협대학獨協大學 시간강사)

1. 운동사와 역사관

1980년 5월 18일 공수부대 투입에서부터 27일 완전진압까지 광주에서의 투쟁은 1995년 5.18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1997년 5월 9일 ‘5.18민주화 운동 기념일’이 제정되면서 국가에 의해 ‘5.18 민주화운동’으로 공식적으로 명명되었다 (윤선자 2019).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국가차원의 명칭뿐만 아니라 ‘5.18’은 “광주민중항쟁” (박현채 2007), “광주시민전쟁” (안병욱 2007), ‘광주봉기’ (이정로 1989) 등의 명칭이 시사하듯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호명되기도 한다 (윤선자 2019; 손호철 1995; 강현아 2004). 이러한 명칭의 다양성은 ‘5.18’이 “4.19나 5.16에 비해 대단히 복잡한 경험이며 한 가지 말로 규정하기 힘든 사건” (최정운 2012, 39)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 서술이 역사가 “자신의 상상력과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산물” (김원 2009, 19)이며 현재적 해석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복잡하고 다양한 경험 속에서 선택된 기억의 차이가 명칭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1980년 5월 당시 광주 시민이 자신들의 투쟁을 “광주민중봉기” 혹은 “광주 의거”로 표현한 것을 감안할 때 (최영태 2015; 김정한 2010), 같은 투쟁에 대해 광주민중화운동, 광주민중항쟁, 광주시민전쟁 등 많은 명칭이 등장한 이유는 이 모든 명칭이 같은 시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바라보는가라는 “역사관” (김원 2009, 18)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용기 1999).

일본의 사회운동사 연구에서도 어떤 한 운동을 역사 속에 위치시킬 때 역사가 안에 존재하는 고정적인 시각으로서의 사관(史觀)이 그 운동의 과도한 서사화 또는 외소화(矮小化)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道場 2015; 小杉 2019). 이 사관의 문제는 5.18에 대한 명칭의 다양성에 나타나듯이, 역사서술에 있어서 현재의 정치나 사회운동과의 연속성과 단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과거의 사회운동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점에 있다. 일본 사회운동사 연구자인 미치바 치카노부(道場親信)는 1945년 이후의 일본 사회운동사에 관한 역사서술은 “혁신사관”, “시민운동사관”, “새로운 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사관”이라는 세 가지의 사관을 전제로 해석해 왔다고 지적한다 (道場 2015, 117 - 18).

이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혁신사관”은 마르크스주의적인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 제2차대전 이후 일본에서 전개된 사회민주주의 좌파와 공산주의자 등의 정치집단과 노동운동의 동향을 중시하는 사관인 반면, “시민운동사관”은 노동운동이나 정당을 중심으로 한 혁신운동의 시대가 끝난 60년대 후반에 전개된 베트남 반전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이 운동의 주체가 되었다고 해석하는 시각이다. “새로운 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¹⁾ 사관”은 신민운동사관이 제시한 조직적이고 좌파중심인 운동관의 상대화를 넘어 이들을 ‘넓은 것’으로 간주하여 역사서술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지니는 사관이다.

60년대 일본 학생운동을 예로 들면 당시의 학생운동에는 신좌파에 속하는 학생 활동가뿐만 아니라 신좌파에는 속하지 않지만 시위에는 참가하는 학생들 (ノンセクト), 또는 구좌파(旧左派)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공산당·일

1) 유럽 학계에서 제시된 new social movement의 논의 (Melucci, Keane, and Mier 1989; Habermas 1981)는 60년대 이후 발생한 다양한 여성해방운동, 문화적 가치의 혁신을 시도한 청년학생운동, 민족적 및 성적 소수자에 의한 자아해방운동 등을 전통적인 계급투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와 자본주의가 인간의 생활 세계에 침투하면서 생겨난 인간 주체의 정체성의 위기와의 싸움으로 설명하려는 것이었다.

본민주청년동맹 (日本民主青年同盟)을 지지하는 학생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주체가 존재하던 60년대 학생운동을 “새로운 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 사관”에 의거해서 서술하게 되면, 구좌파를 부정한 신좌파나 어떤 당파에도 속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중심적인 분석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본민주청년동맹처럼 구좌파의 입장으로 운동에 참여한 일부의 운동 주체는 서술에서 배제되고 만다 (小杉 2018, 6 - 7, 2019, 35).

한국 사회운동사 역시 이러한 사관 혹은 역사관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3.1운동이 내포하고 있었던 폭력적 측면을 배제함으로 3.1운동을 “비폭력·평화”의 상징으로 해석하려는 흐름은 과거의 투쟁을 1987년으로 상징화되어 있는 ‘민주화운동’이나 2016년의 ‘촛불시위’와 같은 현재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백승덕 2019; 천정환 2020).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담론화하는데 성공한 궁극적인 효과가 “5.18 광주항쟁에 담겨 있던 저항적 상징성을 소실” (김정한 2013, 198)이라고 하는 주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현재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민주화운동사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역사관이 존재하고 있다.

어느 시대에도 그들만의 역사관이 존재한다고 보면 80년대 대학생들도 그들만의 역사관을 통해서 5.18을 해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5.18이라는 과거에서 멀지 않는 미래에 도래할 또는 도래해야 할 ‘혁명’의 모습을, 또한 혁명을 실현시키기 위해 활동가로서의 모델을 5.18에서 읽어내려고 하고 있었다. 물론 현재 한국사회의 시각으로 보면 그들의 해석은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당시 학생들은 그렇게 해석하였고 그들에게는 그러한 해석이 ‘정사(正史)’였다. 그러나 5.18을 혁명으로 받아드리면서도 당시의 학생들은, 실제 운동의 실천에 있어 스스로 내면화한 5.18의 모델처럼 행동할 수 있는지 한 인간으로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정사로서의 혁명과 학생운동가의 기억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80년대 학생운동권을 투쟁을 위한 문화나 윤리가 공

유된 한 사회라고 본다면 거기에 맞지 않는 생각이나 기억은 억제되거나 망각될 수밖에 없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80년대 한국학생운동이 서사화한 ‘혁명’으로의 5.18과 당시 운동에 참가했던 한 개인으로의 운동가의 5.18에 대한 기억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80년대 학생운동권이 해석한 혁명으로서의 5.18을 80년대 학생운동에 있어 사상적으로 가장 급진화된 NL(National Liberation)과 CA(Constituent Assembly)의 기관지 『해방선언』과 『민족민주화선언』을 통해서 확인한다. 다음으로 2018년 4월에 필자가 실시한 80년대 학생운동 참여자에 대한 구술조사의 결과를 이용한다. 이를 통해 80년대 당시 학생운동이 구축한 5.18에 대한 해석에 동의하면서도 실제 운동의 실천에 있어 스스로 내면화한 5.18의 모델처럼 행동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한 인간으로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운동가의 기억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역사 서술에 있어서 망각된 기억을 다루는 의미를 드러내 보고자 한다.

2. 혁명으로서의 5.18

80년대 한국학생운동에 관여한 사람들은 5.18 당시 중고생이었던 친구들한테 항쟁의 실상을 전해 듣기도 하고 (정태현 2013, 429), 광주백서와 같은 지하문서를 숨어서 읽거나 (김상숙 2015), 또한 대학에서 열린 사진 전시회 · 비디오 상영회를 통해서(김귀옥 · 윤충로 2007; 허은 2013; 김원 2011) 5.18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슬픔과 분노와 비통함과 죄책감” (김정한 2016, 40)을 서로 나누며 5.18을 기억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80년대 학생운동은 군에 의한 집단발포로 상징되는 국가폭력에 의한 무수한 희생자, 광주 시민의 자기방위로 시작된 시민군의 결성과 무력투쟁, 고립된 상황 속에서 광주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상호부조적인 공동체, 도청에 남아 무장을 하여 진압군과의 최후의 싸움으로 목숨을 잃은 열사 등을 자신들의 행동이나 이념에 맞추어 ‘혁명’에 이르는 과정으

로 해석, 5.18을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주체성의 모델로 기억하게 된다 (김정한 2010, 163 - 64). 학생들에 의해 모델화된 5.18의 기억은 시위 현장과 집회에서 불린 운동가요, 매년 5월에 열린 추모제와 장례투쟁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호출되었고 이 과정에서 5.18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 공고화되어 ‘5.18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학생집단을 탄생시켰다 (김정한 2015, 2016). 환언하면 80년대 학생운동 참여자들은 역사가는 아니었지만 그들만의 역사관을 바탕으로 5.18을 해석, 집단적 기억을 구축해 갔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가 밝힌 바와 같이 5.18 직후에 제시된 ‘광주시민의거’라는 명칭은 전남대 학생운동권에 의해 1985년에는 ‘광주민중항쟁’ 및 ‘혁명적 민중봉기’로 변화, 결국에는 “4.19의 자유민주주의 혁명으로 반독재투쟁에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하고 그것과 결탁한 외세의 제국주의 침략까지 분쇄하고자 했다는 민중해방운동”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용기 1999). 또한 ‘혁명적 민중봉기’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민군에 의한 무장투쟁은 학생운동권이 “비폭력을 타협적이거나 굴욕적인 것으로 간단히 폄하”시키고 대항폭력을 정당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김정한 2013, 207). 그러한 급진적인 해석이 발생한 것은 5.18 이후 운동의 주체, 민중을 결집할 수 있는 조직의 형태, 투쟁노선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발생한 무림-학림(1980년), 야비-전망(1982년), NL-CA 논쟁(1986년) 등 80년대의 수많은 논쟁의 결과라기보다는 어떤 입장이든 방법은 달라도 자유민주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여 민중이 주체가 되는 ‘혁명’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정한 2013, 192 - 97). 즉, 80년대 학생운동은 5.18을 ‘혁명’으로 해석하는 역사관을 구축하면서 5.18을 이상적인 운동의 모델로 삼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해방선언』과 『민족민주선언』에 나타난 5.18

80년대 후반으로 접어드는 86년은 한국학생운동사에 있어 하나의 전환

점이라고 할 수 있다. 1985년까지만 해도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은 그 산하에 투쟁조직체인 삼민투(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을 위한 투쟁위원회)를 두고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이라는 삼민 노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정해구 2011, 126). 그러나 1986년 3~4월 무렵 삼민투는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투쟁위원회’(자민투-NL/National Liberation) 계열과 ‘반제반파쇼 민족민주투쟁위원회’(민민투-CA/Constituent Assembly) 계열로 분화·대립하기 시작하여 각 대학별로 『해방선언』과 『민족민주선언』을 각각 발행하게 된다 (전명혁 2007, 181)²⁾. 1985년에 전국민주학생연합과 전남대 학생운동권이 제시한 5.18에 대한 급진적인 해석이 삼민 이념과 결합하면서 광주민중항쟁으로 정식화되었다는 이용기(1999)의 지적에서 미루어 보면, 자민투와 민민투의 분열과 이념의 급진화의 배경에는 5.18에 대한 보다 급진적인 해석이 있었음을 읽어낼 수 있다.

서울대 자민투가 1986년 5월 13일에 발행한 『해방선언』(서울대학교 해방선언사 1986)과 서울대 민민투가 86년 5월 12일에 발행한 『민족민주선언』(서울대학교 민족민주선언사 1986)에는 양쪽 다 5.18을 앞두고 5.18 관련 특집 기사가 실려 있다. ‘광주항쟁과 그 역사적 의의’와 ‘광주혁명의 현재적 조명’이라는 두 문건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해방선언』이 5.18을 ‘광주항쟁’이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민족민주선언』은 5.18을 ‘광주혁명’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명칭의 차이는 “혁명이라는 단어가 소름끼치는 악귀를 연상시키는 사회”에서 러시아혁명을 궁극적인 모델로 삼고 “공공연히 혁명을 선전·선동하던 그룹”이었던 CA의 시각을 잘 나타내고 있다 (전명혁

2) 당시 NL은 한국사회를 ‘식민지 반봉건사회’로 인식하면서, 기본적인 지배세력을 ‘미제국주의’로 파악했다. 이러한 NL의 관점에서 보면, 1945년 8.15는 해방이 아니라 구식민지에서 신식민지로, 즉 직접 통치에서 대리 통치세력을 내세운 간접 지배로 방식만 변화 됐을 뿐 본질적인 변화는 없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NL은 ‘반미자주화투쟁’을 주축으로 하여, ‘조국통일투쟁’과 ‘반독재민주화투쟁’을 결합하는 소위 ‘3영역론’을 주장하였다. 반면, 한국사회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으로 인식한 CA는 독점자본과 국가권력에 대한 투쟁을 중심과제로 설정, 노동자계급의 해게모니가 관철되는 ‘2단계 혁명론’을 주장하였다. (채장수 2007: 252 - 53; 박사인 1990; 전명혁 2007: 180 - 84).

2007, 187;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89, 203).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이라는 궁극적인 혁명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해방선언』이 민족(국민)의 핵심으로서의 민중을 5.18의 운동주체로 보고 있는 반면, 『민족민주선언』은 민중의 핵심으로서의 노동자계급을 운동주체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5.18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호소된 구체적인 행동방침에도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다. 『민족민주선언』이 “진정으로 광주혁명을 부활시키는 길”로 투쟁조직의 건설 및 헌법제정민중회의의 소집을 학생운동이 펼쳐야 할 전술로써 강조하는 반면, 『해방선언』은 5.18의 출발점으로서의 전남대생의 투쟁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결연한 투지를 불러” 일으켰고 “반동국면을 대중투쟁국면으로 전환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이들의 투쟁을 “희생적 투쟁”이라고 일컬었다. 이러한 행동방침의 차이는 5월 18일의 전남대생에 의한 시위를 중시한 『해방선언』과 5월 22일 이후에 나타난 항쟁과의 조직화를 중시한 『민족민주선언』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두 문건의 공통점으로는 5.18에 나타난 “무장투쟁”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장투쟁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NL과 CA의 입장 차이가 다신 한 번 드러난다. 『해방선언』은 5.18을 해방 이후 “30여 년 만의 최초의 대중적 무장투쟁”이라고 규정하면서 “우금치(牛禁峙) 벌판에서 일제에 대한 적개심으로 타올랐던 조선민중의 무장투쟁정신은 항일무장투쟁과 45년 후 반미무장투쟁으로 이어졌고 80년 광주항쟁에서 그 훌륭한 전통이 한국 민중의 핏줄에 서려 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던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NL은 무장투쟁을 긍정적으로 보고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의 전투, 그리고 1930년대의 항일 무장투쟁의 연장선상에 5.18을 위치시키는 해석의 틀(민족해방사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이창언 2013)³⁾.

3) 이러한 해석의 틀은 1986년 4월 10일에 배포된 “반미자주화반파쇼 민주화선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말 이래 한반도의 역사는 미·일 제국주의의 침략의 역사였고, 이에 대한 민중의 치열한 투쟁의 역사였다.” (서울대학교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 1986).

한편 『민족민주선언』은 5.18의 무장투쟁을 “물리적 기반이 상대적·절대적으로 취약한 민중의 자연발생적 봉기”가 짧은 기간에 “무장투쟁으로 전화”한 것을 “필연적 발전”으로 보고 있다. CA는 사회주의 혁명 혹은 계급해방에 이르는 길은 “폭력혁명 없이 불가능하다” (레닌 [1917] 1957, 37)는 레닌적인 혁명관에서 강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백태웅 1997). 따라서 NL처럼 과거의 투쟁과의 연속성 속에서 5.18의 의의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무장투쟁은 역사의 필연이기 때문에 5.18의 무장투쟁 자체가 한국의 혁명을 예고하는 신호이며 앞으로 지속해야 할 행동 모델로서 5.18을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NL과 CA는 사상적인 차이로 인해 5.18이라는 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 이를 기반해 각기 다른 운동주체나 학생운동가로서의 행동모델을 추출하였다. 또한 5.18에 나타난 무장투쟁을 둘러싸고도 NL이 과거의 이상적인 투쟁의 재현으로 보고 있는 반면, CA는 앞으로 다가올 혁명의 모델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의 배경에는 5.18이 ‘민족해방투쟁이었기 때문에 중요하다’ 혹은 ‘무장투쟁이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가치관이 존재한다. 이 가치관의 체계로서의 역사관을 학생들은 공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건에 나타난 역사관은 어디까지나 조직의 핵심 멤버들이 만든 공식적이며 선언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운동 참가자 개인의 차원의 역사관이나 기억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활동가 개인의 차원에서는 조직의 가치관에 동의를 하면서도 또 그렇지 못한 기억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4. 5.18을 둘러싼 한 운동가의 기억

일반적으로는 80년대 학생운동 참여자에게 있어서 5.18은 “직접 경험했던 그렇지 않았던 광주에 도덕적 분노에 불을 댕겼던 촉발제” (김귀옥·윤충로 2007: 160)였고 이러한 5.18에 대한 공감은 운동권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생도 공유하고 있었다고 지적되어 왔다 (허은 2013: 203). 강원도에

서 태어나고 학생운동을 거쳐 노동운동에 관여하게 된 수도권의 대학을 다닌 구술자A(83학번)의 다음과 같은 구술에서도 당시 학생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광주에 대한 기억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내가 평생 운동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바로 그 광주항쟁백서를 보면서, 음, 한마디로 말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 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에요. 그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전혀, 막연하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광주에서 많은 사람이 뭐 죽었다, 이런 뭐 전두환의 집권에 반대하는 데모가 있었다,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도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 그래서 사실 저는 광주항쟁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가 그 광주항쟁백서를 보면서, 그리고 인제 대체적인 윤곽을 알게 됐죠. 윤곽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딱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나도 민주화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정말로. 그때부터는 인제 그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는데, 어, 이렇게 총을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나도 충분히 죽음을 무릅쓰고 투쟁할 수 있겠다,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울 수 있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거구. 예. 그 다음부터는 뭐 운동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 같은 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그러나 광주에 대한 기억은 학생운동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서울에서 태어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서 학생운동에 참여한 구술자B(83학번)는 대학에 들어오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의 친구 중에 운동에 관여하지 않은 친구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활동가가 되는 과정이었다고 하면서 당시의 기억을 다음과 같이 되새기었다.

어떻게 말한 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때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많이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일종의 매달려 있는 짐이 너는 1980년 5월 27일 날 도청에 남아 있었겠느냐, 예를 들어 이 질문이었거든요. 그니까 너는 죽을 수 있느냐, 혁명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질문을, 그니까

이 분위기, 엄숙주의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
... 그니까 그래서 뭐,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하고 그런, 실제 시간이 없
기도 하고 뭐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거리를 두게 되고 그래서 나는 그
들과 다른 사람이다, 이게 뭐 우월감이건, 아니, 우월감은 당연히 있겠죠.
뭐 등등 이렇게 해 왔던게 하나의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이 구술은 본인이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또 5월 27일에 도청에 남아
야한다고 생각했기에 친구들한테 도덕적 우월감과 정의감까지 느꼈던 어쩔
수 없었던 언행에 대한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5.18 광주에서 펼쳐진
억압과 투쟁이라는 사실과 관계없이 광주에 대한 기억은 한 인간의 인간관
계까지 좌우할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5.18에 대한 기억은 운동가와 일반 학생의 관계에만 균열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 사이에도 많은 논란거리였다. 왜냐하면
5.18이 80년대 학생운동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한 원인이었던 만큼 그 때 광
주에 있었으면 어떻게 행동했겠는가라는 질문은 80년대 학생운동가에게 피
할 수 없는 윤리적인 질문인 동시에 운동노선에 대한 평가를 내포한 것이
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구술자B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어쨌든 혁명, 그 혁명에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이것이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거예요. 광주를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
린 대로 너는 광주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 이 질문,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면 또 우리가 하는 일에는 그 일이 닥칠 거라고 하는 것
을 우회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면 다시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다시
거기에 직면할 텐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개의 대답이 나와요. 하나
는 거기서 죽어야지 하고, 살아남아서 후일을 도모해야지. 이 두 대답이
나오는데 두 대답이 각각 맞죠. 각각 맞는 대답인데, 그래서 그거는 사실
또 아주 도덕적 개인의 결단과 관련된 질문이기도 하지만 노선과 관련된
질문이기도 했어요. 이게 무학논쟁, 무림, 학림하고도 사실 관련, 결국 관
련되는 건데. 무림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른바 대중노선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가서 이런 거면 후일을 도모하자는 노선처럼 들려요. 무림 했던 사람의 도덕적 태도가 그런 게 아니라, 상관없이 노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학림의 노선은 어쨌든 당장 이런 싸움을 하고 예를 들면 학생, 그니까 특히 학생운동가에게는 그렇게 들리죠. 무림의 노선은 학생운동을 이렇게 한 다음에 쪽 나가서 공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리는 것에 비해서 학림은 학생이 자체적으로 지금 뭔가 싸울 필요와 어쨌든 이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도청에 남아서 싸우는 거랑 비슷하게 유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묘하게 두 가지가 이렇게 개인의 윤리적 태도이기도 하지만 노선과도 관련된 중첩된 질문들을 서로 주고받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윤리적인 태도와 실제 행동은 다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술에 나타나듯이 5.18에 대한 기억은 운동가에게 죽음과 삶이라는 윤리적인 태도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상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이런 질문을 주고받을 때마다 5월 27일의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한 윤상원이 남긴 “우리가 비록 저들의 총탄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김정한 2013: 127)라는 말을 상기했을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의 신념으로 계속해 온 야학활동의 과정에서 만난 노동자나 여공들을 상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임송자 2017). 즉, 5.18의 기억은 그 충격과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80년대 학생들에게 죽음과 삶이라는 양자택일을 강요하게 되면서 당시의 다양한 학생들의 기억을 감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살핀 『해방선언』이나 『민족민주선언』과 같은 문건은 언어는 거칠지만 주장하고자 하는 점은 비교적 명료하다. 다르게 표현하면 공식적인 문건은 투철한 목적의식이 관철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80년대 학생운동가들이 5.18을 통해서 느낄 수밖에 없었던 어두움이나 무거움은 배제된다. 다시 구술자 B의 말을 들어보자.

그 무거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었던 어떤 무거움이 있어요. 그니까 분명히 윗선에서는 까불고, 당연히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이 까불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먹을 거 먹고 술도. 그런데 어떤 무거움이, 꼭 누르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가 위에서 뭐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 위태로움. 그건 좀, 그래서 무거움이라는 말 이외에는 잘 생각이 안 돼네. 무겁다. 뭐가 무겁게 있는 어떤 거 그게 결국 광주, 광주, 정확히 말하면 광주에 대한 자기 인식이죠. 광주를 그렇게 읽는 거죠.

NL과 CA가 공통적으로 해석해낸 무장 봉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한 학생운동가에게는 글과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고 상상하면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구술자 B는 80년대에 절실하게 느꼈던 공포에 대해서 말하면서 무장 봉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었다.

정말 이게, 하아, 러시아가 됐건 프랑스가 됐건 정말 싸움이 벌어지면 정말 어떻게 될까 이런 거였어요. 내전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죠. 당시는 내전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는데요. 이른바 무장 봉기. 사실은 상상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텐데. 이게, 야 이게 괜찮은 일인가 그런 생각을 실제 했어요. 그니까 억압을 생각하면 그 억압을 깨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체제라는 게 그냥 만들어질 수는 없을 거고. 보아하니 책을 보아하니 다른 나라를 보아하니 막 싸우고 하는 건데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예를 들면, 사람 죽이는 일이, 예를 들면. 끌려가는 것도 두렵지만 싸우면서 내가 누군가를 죽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결국 그걸 한 건데. 그걸 한 거잖아요. ... 물론 그런 일이 당시에 벌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런 식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니까 무장봉기, 실제 준비한 것도 없으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준비한 게, 별로 준비한 게 없죠.

B의 구술에는 『해방선언』 및 『민족민주선언』이 5.18을 해석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무장봉기를 진지하게 실천의 차원에서 사유하고 있었던 한 운동가의 기억을 읽어낼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반복되는 역사나 역사의 필연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정말 무장 봉기가 벌어지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죽어야 하는 상황에 닥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나 두려움과 같은 감정은 문건에서는 아예 언급되지도 표현되어 있지도 않다.

여기까지 5.18의 기억으로 인하여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친구들, 윤리적인 태도로서의 죽음과 삶 사이의 갈등, 5.18에서 읽어낸 무거움, 그리고 무장 봉기에 대한 공포라는 80년대에 학생운동가였던 한 사람의 기억을 실마리로 하여 공식적인 5.18에 대한 기억과 거리가 먼 기억을 살펴봤다. 단 한 사람의 기억이지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시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왜 이러한 기억은 공유되기를 거부당해 왔는가?

80년대 학생운동은 이념에 있어 민족해방, 계급해방, 사회주의 혁명, 그리고 민주화라는 차이가 있어도, 시위, 의식화교육, 위장취업 등 다양한 활동과 그 과정에서 고문, 전경에 의한 구타, 또는 감옥생활을 무릅쓰고 치열하게 싸운 기억을 가진 집단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한 운동에 대한 진지한 태도나 생각은 문건이나 증언집과 같은 공식적인 장을 통해서 공개되며 사회적으로 기억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억은 현재 한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거나 누군가가 기억되어야 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지되어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룬 구술자B의 기억은 5.18을 무조건으로 긍정적으로 기억하는 것도 아니며 학생운동권의 공식적인 입장에서조차 거리가 먼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되기를 거부당한 기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지적하고자 한 것은 이러한 기억되기를 거부당한 기억을 생산하는 한 원인으로서의 역사관이었다. 민주화담론에서 5.18이 지닌 봉기나 시민군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는 것처럼 5.18의 피해가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룬 원동력이었다는 역사관에 의거한 역사서술에는 5.18이 80년대 학생운동가에 있어서 균열의 원천이었다는 기억은 서술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80년대의 문맥에서 보면 ‘혁명’이라는 목표를 흐리게 하는 기억은 억제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역사관을 배제하고 모든 기억을 역사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기억을 망라하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 한 정보의 집합체에 불과하며 역사관 없이 역사 서술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뭔가를 보려는 것은 뭔가를 보지 않으려는 것과 같고 기억하려는 것은 망각하려는 것과 같다”(Schudson 1997, 348)는 지적이 있듯이 망각을 강요당한 기억이나 목소리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한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려는지 부각될 거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현아. 2004. 「5.18항쟁의 성격주체: 연구사적 측면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4(2): 125 - 49.
- 김귀옥 · 윤충로. 2007. 『1980년대 민주화운동 참여자의 경험과 기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김상숙. 2015. 「5.18항쟁과 1980년대 대구 학생운동」, 『NGO연구』 10(1): 23 - 63.
- 김원. 2009. 『87년 6월 항쟁』, 책세상.
- _____. 2011.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 이매진.
- 김정한. 2010. 「5.18 광주항쟁 이후 사회운동의 이데올로기 변화」, 『민주주의와 인권』 10: 161 - 90.
- _____. 2013. 『1980 대중 봉기의 민주주의』, 소명출판.
- _____. 2015. 「1980년대 운동사회의 감성: 애도의 정치와 멜랑콜리 주체」, 박현호 외 편, 『백 년 동안의 진보』, 소명, 645 - 70.
- _____. 2016. 「민주화운동의 시대」, 김종엽 외 편, 『한국현대 생활문화사 1980년대』, 창비, 33 - 61.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 1989.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 사건』, 아침.
- 박사인. 1990. 「NL-CA 논쟁」, 중앙일보사 편, 『80년대 한국사회 대논쟁집』, 중앙일보사, 247 - 52.
- 박현채. 2007. 「80년대 민족민주운동에서 5.18민중항쟁의 의의와 역할」, 5.18기념재단 편, 『5.18민중항쟁과 정치 · 역사 · 사회』, 5.18기념재단, 41 - 58.
- 백승덕. 2019. 「비폭력의 스펙터클을 넘어서: 3.1운동 100주년의 폭력론」, 『역사비평』 129: 36 - 62.
- 서울대학교 민족민주선언사. 1986. 「광주혁명의 현재적 조명」, 『민족민주선언』 제4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1986. 5. 12.
- 서울대학교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 1986.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투쟁선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1986. 4. 10.
- 서울대학교 해방선언사. 1986. 「광주 항쟁과 그 역사적 의의」, 『해방선언』 제4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1986. 5. 13.
- 손호철. 1995. 「5.18 광주 민중항쟁의 재조명」, 『진보평론』 11: 79 - 102.
- 안병욱. 2007. 「5.18광주민중항쟁의 의의와 역사적 평가」, 5.18기념재단 편, 『

-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18기념재단, 13 - 40.
- 윤선자. 2019.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91: 201 - 33.
- 이용기. 1999. 「5.18에 대한 역사 서술의 변천」, 학술단체협의회 편, 『5.18은 끝났는가』, 푸른숲, 393 - 419.
- 이정로. 1989. 「광주봉기에 대한 혁명적 시각 전환」, 『노동해방문학』 5월호: 14 - 57.
- 이창언. 2013. 「NL(민족해방)계열 학생운동의 주류화와 한계」, 이호룡·정근식 외 편, 『학생운동의 시대』, 선인, 211 - 64.
- 임송자. 2017. 『배움과 좌절의 갈림길, 야학』, 서해문집.
- 전명혁. 2007. 「1980년대 비합법 정치조직」, 정해구 외, 『한국 정치와 비제도적 운동정치』, 한울, 169 - 94.
- 정태현. 2013. 「1980년대 인천대 학생운동 시각에서 본 선인학원 시·공립화 과정과 의미」, 이호룡·정근식 외 편, 『학생운동의 시대』, 선인, 431 - 78.
- 정해구. 2011.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 역사비평사.
- 채장수. 2007. 「1980년대 한국 학생운동의 자주노선」, 『한국동북아논총』 42: 239 - 64.
- 천정환. 2020. 「3.1운동 100주년의 대중정치와 한국 민족주의의 현재」, 『역사비평』 130: 8 - 51.
- 최영태. 2015. 「5.18항쟁의 명칭문제: ‘광주’와 ‘민중’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5(3): 113 - 48.
- 최정운. 2012. 『오월의 사회과학』, 오월의봄.
- 허은. 2013. 「1980년대 상반기 학생운동 체계의 변화와 학생운동 문화의 확산」, 이호룡·정근식 외 편, 『학생운동의 시대』, 선인, 157 - 210.
- 小杉亮子. 2018. 『東大闘争の語り: 社会運動の予示と戦略』 新曜社.
- . 2019. 「『史観』の困難と生活史の可能性—1960年代学生運動研究の経験から」 大野光明他 『運動史とは何か』, 29 - 46. 新曜社.
- 道場親信. 2015. 「戦後日本の社会運動」, 大津透他編 『岩波講座 日本歴史 第19巻 近現代 5』, 115 - 48. 岩波書店.
- レーニン. (1917) 1957. 宇高基輔訳 『国家と革命』 岩波書店.
- Habermas, Jürgen. 1981. “New Social Movements.”, *Telos* 1981 (49): 33 - 37.
- Melucci, Alberto, John Keane, and Paul Mier. 1989. *Nomads of the Present*:

Social Movements and Individual Needs in Contemporary Society,
London: Hutchinson Radius.

Schudson, Michael. 1997. "Dynamic of Distortion in Collective Memory",
Memory Distortion, ed. Daniel. L. Schacter, Harvard University Press,
pp. 346 - 64.

홍콩 반권위주의 운동의 연대와 회복탄력성 : 교훈과 전망

에릭 라이

※ 이 발표문은 초안이므로 인용을 삼가주시요.

1. 서론

2019년 6월 이래로, 중국 본토로의 송환을 허용하자는 제안[홍콩 범죄인 송환법안]에 반대하는 연속적인 집회들은 홍콩 내 반권위주의 운동의 부활로 성장했고 홍콩에 대한 베이징의 통제에 대한 도전이 되었다. 이 짧은 글은 두 가지 질문에 답함으로써 주권국인 중국의 탄압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민주주의뿐 아니라 반권위주의 홍콩 시민들의 저항까지 설명한다. 먼저 2019년 반권위주의 운동의 연대가 형성된 이유는 무엇일까. 둘째, 그 움직임이 현재까지도 어떻게 회복탄력성(resilient)을 지니는가?)

이 글은 2019년 송환법 반대운동의 지도자로 가득한 성격이 반권위주의 운동의 결속을 다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지도자로 가득한(leader-full)’이라는 형용사는 사회운동계에서 관행적

1) 이 글의 몇 가지 아이디어와 의견은 나의 최근 저작인 “Solidarity and implications of a leaderless movement in Hong Kong: its strengths and limitations”[홍콩에서 리더 없는 운동의 연대와 시사점: 그 강점과 한계],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53(4), 41-67 (co-authored with Ming Sing)에 의존하는 것이다.

으로 행해지는 전통적인 형태의 하향식 없이, 스스로를 동원하고, 기획하고, 행동을 조직하는 들로 가득차 있다고 시위를 해석한 언론인과 활동가들이 만들었다(Hui, 2019, MobLab Team, 2019). 홍콩에서 소중히 여기던 자유와 법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은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민주화 운동들의 부재 속에서 없는 시위의 등장을 초석 삼아 지도자로 가득한 운동을 살아나게 했다. 시위자들의 단결은 대중운동들과 익명의 운동가들이 만들었다. 이 단결은 도시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서 다수의 창조적인 전략과 전술에 따라 유지되었다. 탈중심적 지도자와 저항은 2020년 국가안전법 시행으로 시위대와 유명 지도부가 구속됐을 때의 운동의 회복탄력성에도 기여했다. 시위 지지자들은 경제적 불매운동, 보이콧, 노동조합 형성과 법적 지원 등 기발한 방식으로 2019년 운동의 유산을 지속했다. 자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홍콩의 반권위주의 운동의 맥락을 다음 절에서 설명한다.

2. 연대의 건설: 분열에서 단결로

홍콩의 민주화 운동은 1842년 이래로 홍콩의 종주국이었던 영국과 중국이 1997년 홍콩 주권 이양을 위한 유엔 등록 조약을 체결한 이후인 1980년대에 시작됐다. 초기 민주화 운동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1) 영국 식민지 행정부에서 도입한 선거제도의 보다 자유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과 (2) 홍콩의 자치권을 보존할 수 있는 완전한 민주주의에 의해 공산주의 독재 통치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1989년 6월 4일 베이징의 천안문 학생 운동 탄압 이후 홍콩 시민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홍콩에서는 국제 인권규약(ICCPR)에 따라 홍콩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권리장전이 제정됐고, 새로운 주권 하에서 ‘미니 헌법’ 역할을 하는 기본법은, 향후 총선거에서 완전한 보편적 참정권이 달

성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국 정부는 홍콩을 완전한 민주주의를 누리게 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억압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다. 2003년 홍콩의 괴뢰 정부가 엄격한 국가안전법을 도입했지만 50만 명 이상의 홍콩 시민들이 이 법안을 규탄하고 홍콩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 끝에 철회됐다. 그 후, 중국 정부는 홍콩과 중국의 정치적 억압 및 경제 통합에 의한 잠식 전략을 강화했다. 경제 세계화와 신자유화의 과정은 국책과 민간사업 둘 다 홍콩의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적으로 필요한 다른 산업으로 흘러가는 중국 자본을 특혜 하여 홍콩의 중국에 대한 강한 경제적 의존을 형성하였다.

2012년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중국과 홍콩의 대립은 더욱 고조됐다. 시주석은 홍콩에 대한 그의 통치 정책을 민주화뿐만 아니라 홍콩의 자유와 사법적 자치권을 억압함으로써 강화했다. 중국 정부가 향후 국민 투표로 뽑히는 행정장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출마 여부를 선별하기 위한 필터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결정, 그로 인해 2014년의 잘 알려진 우산운동으로 이어졌던 결정에서 홍콩의 완전한 자치를 막겠다는 시 주석의 생각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가에 의한 홍콩의 시민자유 침해의 초기에는 확대되는 정치적 억압에 저항하기 위한 시민 사회로부터의 강력한 통합적 동맹을 맺지 않았다. 오히려 홍콩 민주화 운동은 2019년 송환법 반대운동 이전까지 일련의 분열과 내부 마찰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여러 해 동안 홍콩 민주화의 교착 상태에 대해 민주화 세력의 다른 진영들이 서로를 비난했다. 온건파인 민주파와 노조는 민주개혁에 대해 중국 정부에 거둬 타협을 했고, 기존의 평화 시위보다 자신들의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무장 시위자들의 운동 전략과 전술을 지지하기를 꺼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우산운동 기간 동안, 학생들은 점거지에서 지도부를 장악하고, 정부를 압박하는 행동을 확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급진적인 점거자들에 의해 비난받았다. 마지막으로,

민주화 운동의 중도 진영과 급진 진영 사이의 분열 또한 주권 문제에 있다. 전통적인 민주화 세력이 중국 주권의 정당성에 도전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반면, 홍콩 내 시민 민족주의 세력은, 인민에 의한 자결권 복원을 주장해 왔고, 이들 중 일부는 중국으로부터 홍콩 독립을 요구하기도 했다.

비록 어떤 증거도 대중들 사이에서 홍콩을 독립적인 정치체로 만드는 것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여주지 못하지만, 온건한 민주화 진영과 급진적인 지역주의 진영 간의 상호 비난은 민주화 운동을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었고, 홍콩 시민사회에 대한 침해와 운동가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확대하기 위해 권위주의 국가에 의해 이용되었다. 우산운동 이후 5년 동안, 최소한 9명의 선거 후보들이 자결 또는 홍콩 독립을 지지한다는 정치적 이유로 의회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박탈당했다. 독립을 지지하던 홍콩 민족당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정부에 의해 해체됐고, 해체된 당 대표와 대화를 주최한 외신 기자도 추방됐다. 우산운동 학생 3명 등 활동가 16명은 처음에는 사회봉사 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이후 수감됐다. 우산운동 활동가 9명도 시민 불복종 행위로 즉시 금고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반적으로, 2014년 세계적으로 알려진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부의 보복으로 정치적 탄압이 두드러졌다. 다만 우산운동에서 지식인층 활동가, 학생연합과 정당 지도부, 전직 국회의원, 기독교 목사들의 증언과 판결은 2019년 많은 민주화 시민들을 움직여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하게 했고 수감자들과의 지지와 연대를 보여주었다.

송환법 반대 시위운동은 주권국가의 요청에 따라 홍콩 주민의 중국 본토 이송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지 몇 달 뒤인 2019년 촉발됐다. 이 제안은 행정 각부가 입법부의 아무런 견제 없이 중국으로부터의 이송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판사 및 법원에서 이러한 요청을 검토하는 정당한 절차를 압박한다. 이 법안이

개인의 자유와 홍콩의 법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면서, 분열된 운동은 다른 민주화 진영의 단결로 바뀌어 이 법안에 반대하게 되었다. 이 법안은 모든 야당 인사들을 중국 형사 사법 제도 내에서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정치적 영역에 걸친 모든 야당 인사들을 억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합체와 함께 온건적, 전통적인 민주화 정당과 지역주의 단체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지지자들과 대중들을 동원했다. 2019년 6월 9일 송환법에 반대하는 100만 명의 행진을 앞두고 온라인 포럼 “LIHKG[홍콩의 SNS. 2016년 개설되었으며 2019년 민주화 운동에서 시위 일정 및 대처방법들을 전파하였다.]”의 일부 활동적인 사용자들은 송환법 개정에 반대하는 선전 활동을 하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시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팀을 구성했다. 수십만 명의 시민들도 학교, 직장, 교회 등에서 동료들 사이에 반독재 법안 성명서를 돌리며 온라인 서명운동에 나서 최소 376건의 온라인 성명서(CitizenNews, 2019)에서 27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는 등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이러한 행동들은 통일된 목소리로 법안에 저항하는 시민사회의 결속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송환법 반대운동의 연대는 정부 계획의 위협 및 수감된 운동가들과의 정서적 유대감뿐만 아니라, 크게 인식된 시위 관리의 경찰의 만행과 젊은 시위자들의 자기희생 같은 운동 초기의 고통스러운 공통경험에서도 기인했다. 경찰이 고무탄, 유효기간이 지난 최루탄, 물대포, 심지어 실탄과 같은 불균형적인 힘을 공공질서 치안 유지에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증거가 언론과 국제 NGO에 의해 널리 보도되고 기록되고 있다. 현지 학자들의 현장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경찰의 시위대 처우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2019년 7월(Lee, 2019) 이후 송환법 반대 운동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 설상가상으로, 몇몇 젊은 시위자들은 운동 초기에 법안을 철회하고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라는 그들의 요구를 다시 언급하는 메모를 남기면서 자살했다.

마지막으로, 2019년 7월 1일 수백 명의 시위대가 입법회 건물에 난입했을 때, 그 중 한 명은 자신의 신분을 대중에게 알리는 가면을 벗으며 시위대들의 건물 잔류를 촉구했고 시민들에게 그들을 보호하러 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호소했듯이, 점거는 운동의 장기적인 실패로 끝날 것이다.

비록 점거자들이 마지막에 건물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지만, 피땀을 흘린 시위자들의 용기 있는 자기희생은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운동에 지지하고 참여하도록 움직였다. 운동권마다 다른 진영들이 최대한 많은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 분권화라는 가치와 함께 더 큰 통합을 이뤄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시위 철학과 전술의 변화는 홍콩 내 반권위주의 운동의 결속력과 회복탄력성을 구축한 지도자로 가득한 운동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다음 절에서 검토된다.

3. 지도자 없는 시위에서

지도자로 가득한 운동에 이르기까지

송환법 반대운동은 전통적인 지도자는 없지만 지도자로 가득했다. 현장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응답한 시위대의 4.5%만이 조직에 의해 동원됐다고 주장한 반면, 15.1%는 스스로 운동을 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5.9%가 온라인 포럼을 시위와 관련해 가장 인기 있는 정보교환 창구 중 하나로 취급한 것으로 조사됐다(Lee, 2019). 급진적인 시위자들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전투적이고 파괴적인 시위 전략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평화롭고 온건한 시위자들은 연대 행동을 위한 시위 전술 개발뿐만 아니라 동원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즉, 시위대는 뛰어난 운동권이나 단체의 지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의 지도자로 가득한 충만성을 설명하는 다섯 가지 예를 제공한다.

첫째, 전통적인 민주화 세력과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이 시민들을 함께 동원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하향식의, 조직 중심의 동원을 제거하였다. 민간인권전선(Civil Human Rights Front, CHRF)은 민주화 정당, 노동조합, 교회 공동체, 인권 옹호 단체 등 40여 개 회원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 플랫폼으로 전통적인 민주화 진영의 주요 집회 동원자로 활동했다. 2002년 이후 노련한 인기 시위 조직이었던 CHRF는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하는 9개의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으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전반적으로 완전한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주최 측이 추산한 바와 같이, 집회 중 네 곳은 100만 명 이상의 참가자들에 의해 치러졌다. CHRF는 세계적인 언론의 관심을 끈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는 것은 물론,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전직 국회의원들과 가톨릭 추기경의 믿음을 얻은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612 인도주의 기금과 무보수 변호사 모임이 체포한 시위자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직되었다.

시위 참여의 전통적인 형태와는 별도로, 많은 익명의 시위자들은 일선에서 시위 행동을 결정하고 조정할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텔레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사용했다. 시위 조직에서부터 시위 현장의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출구 계획 마련을 위한 연락 교환 등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다수의 텔레그램 그룹과 채널이 만들어졌다. 전통적인 민주화 세력은 주류의 평화적인 시민들을 동원하여 시위를 벌이는데 주력한 반면 급진적이고 호전적인 시위자들은 스스로 가상 플랫폼을 통해 시위 행동을 조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할 분담은 분명했다. ‘물이 되자’, ‘밀고자도, 분열도 없다’와 같은 운동 구호가 시위대 사이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되면서 각 진영은 시위 이데올로기와 전술에 대해 서로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위 행동의 유동성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강조했다 (Lee 2020).

둘째로, 여러 분야를 가로지르는(cross-sectoral) 동원은 지역 및 국제 언론으로의 이동에 대한 도시 전체의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수행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분야를 가로지르는 서명운동은 2019년 6월 송환법 반대 운동이 발발한 주요 원동력이었다. 나중에 부문 동원은 더욱 포괄적으로 되었다. 개인 단체들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고 ‘홍콩 어머니들’이나 개신교 성직자, 의사, 공무원과 같은 그들의 감성적인 혹은 직업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운동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 운동의 연대와 연속성을 공고히 하는 다른 축으로 활약하면서 일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 단체들은 자신들이 운동의 지도자라고 주장하지 않고, 운동의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 조직자 역할을 했다. 여러 분야에 걸친 동원은 시위에 대한 확고한 대중의 지지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운동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시위 참여 비용을 낮출 수 있었다. 그들의 실질적인 자원 제공과 법적, 의료적, 심리적, 정신적, 가족적 요구에 대한 시위자들에게 대한 지원은 전체로서 강화된 운동의 연대뿐만 아니라 시위 참여의 다양성을 강화시켰다.

셋째, 저항의 지역사 및 세계사를 통해 배운 시위대는 예술과 연대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세 가지 시위 전술을 개발하여 운동을 활기차며 탄력성 있게 유지하였다. 예술은 시각, 움직임, 음악적인 형태이건 간에 많은 시위대와 전문 예술가들이 사회운동의 확립과 가까운 정치적 힘을 불러일으키는 예술작품과 예술활동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회운동과 연관성이 높다(Pang 2020). 송환법 반대 운동에서는, 도시의 이웃과 인기 있는 장소에 걸쳐 다수의 “레논 벽”이 설치되었다. 레논 벽은 사람들이 점령 지역의 우산 운동에 대한 그들의 견해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정치적 메시지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상징적인 장소였다. 2019년 시위에서 부활해 도심에 널리 퍼져 예술적 친운동 선전을 펼칠 수 있는 정치공간인 레논 벽은 행인들을 끌

어플어 스티커 메모를 하는 등 일선 시위대와 연대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홍콩의 길(the Hong Kong Way)”이라고 이름 붙여진 인간 사슬의 형성과, “영광이 다시 오길(Glory to Hong Kong)”이라는 새로운 민중가요(protest anthem)를 노래하는 것도 예술적 시위자들의 연대를 위한 또 다른 사례였다. 그들은 1980년대 말 발트해 국가들의 “발트의 길”과 “노래 혁명”에서 영감을 받았다. “홍콩의 길”과 “영광이 다시 오길”은 송환법 반대 운동의 주요 시위와 달리 온라인 포럼에서 무명 운동가들이 주도했다. 텔레그램 그룹을 통해 조율되고 언론 홍보를 통해 홍보된 최초의 인간 사슬 행동은 2019년 8월 홍콩의 3대 거점과 사자산(Lion Rock)의 정상에서 이루어졌다. 45,0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45킬로미터 길이의 인간 사슬을 만든 것으로 추정되었다. 새로운 민중가요를 노래하기 위해, 가요는 익명의 시민들에 의해 녹음되어 유튜브에 업로드 되었다. 가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강화한다는, 시위자들의 경험과 정서에 의지하며 폭넓은 시청과 관심을 끌었다. 사람들은 거리 시위와 쇼핑몰, 축구 경기, 심지어 교회와 같은 다른 장소에서 노래를 연주하고 노래하기 시작했다. 인간 사슬과 민중가요를 노래하는 행동은 일반 학생들과 이웃 거주자들에 의해 널리 모방되었고, 그들은 각각 고등학교 캠퍼스와 주택 단지 안팎에서 수많은 시위 운동을 시작했다(Lai and Sing 2020). 국가의 강력한 보복에 맞서 운동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지도자로 가득한 운동이 이루어졌다.

4. 경제 및 사법에서의 회복탄력성 강화

중국 정부는 2020년 6월 반권위주의 운동 진압을 위해, 홍콩 현

지 입법부를 우회하는 국가안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법은 ICCPR(국제인권규약)과 홍콩 기본법에 규정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보호를 근본적으로 위반했고, 여러 법적 조치에 의해 현지 독립 사법부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지금까지, 100명 이상의 정치 운동가들이 개정 선동, 전복, 테러 행위, 그리고 외세와의 공모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들 대부분은 보석금이 기각되었고 현재 구금되어 있다. 정치적 활동가들의 강경 조치 및 직접 행동과 거리 동원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송환법 반대 운동의 흔적은 시민들의 삶에서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소비자운동(political consumerism)은 시민들이 반권위주의 운동에 대한 지지를 지속하는 주요 전략으로 작용해 왔다. 정치적 소비자운동은 공정무역 제품을 사들이고 노동 착취공장(sweat factory)의 물건을 보이콧하는 등 경제적 소비를 통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홍콩의 경우 경제 내 친여권과 반여권 진영을 구분해 시위대와 민주화 시민들에 의해 정치적 소비자운동이 실천되어 왔다. 시위자들은 만약 식당과 소매점이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하는 파업에 동참하고, 공개적으로 그 운동을 지지했다면 “노란색 경제 씨클(yellow economic circle)” 안에 있는 것으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중국 자본가와 친정부 성향의 기업인이 소유한 공동기업과 체인점, 식당 등도 “파란색 경제 서클(blue economic circle)”의 일부로 확정했다. 시위 지지자들은 또한 시위대와 친운동 상점, 그리고 민주화 소비자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여 노란색 경제 씨클 구성원을 탐색했다. 게다가, 민주화 시민과 상인들이 현재의 혐의 때문에 해고된 시위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또한 식료품 배달과 같은 다른 서비스 산업에서 정치적 소비자운동을 확대하면서 노란색 경제 씨클은 더 세련되게 진화했다. 새로운 국가안전법이 통과된 후, 노란색 경제 씨클의 많은 상점들과 식당들은 이 운동을 홍보

하는 포스터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노란색 가게"와 "노란색 식당"의 행적은 민주화 지지자들을 계속해서 끌어 모았다. 게다가, 사법기관이 노란색 가게의 주인이나 직원들을 괴롭히거나 체포한 후에, 많은 시민들은 국가의 시위 진압에 대한 숨겨진 저항 운동을 지지하고 영리하게 행동하며 연대력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그 지점으로 물건을 사러 갔다(Hong Kong Free Press, 2021).

반권위주의 운동의 회복탄력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2019년 말 촉발된 새로운 노조연합의 지속적인 물결이다. 송환법 반대 운동 과정에서 많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노조가 결성될 경우, 동료들을 조직해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노조 대표자들이 의회에서 친정부 쪽에 압박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2019년 시위 당시 설립된 시민사회 주요 플랫폼인 “홍콩 온 스트라이크”에 따르면 최소 50개 이상의 신생 노조와 전통적인 민주화 노조가 연합전선을 형성해 홍콩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총파업에 대비했다(Hong Kong on Strike, 2019). 2020년에는 450개 이상의 노조가 공식 등록되었다. 새 노조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COVID 전염병이 발발했을 때 정부가 국경을 폐쇄하도록 압력을 가했던 홍콩 병원관리국(Hospital Authority) 직원 연합의 파업과 같은 비대중적 지배구조에 대한 파업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국가안전법의 위협으로 일부 새 노조가 해체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조들이 계속 운영되어 조합원을 모집하고 정치탄압과 병행되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자료들을 배포하고 있다. 2021년 4월 노조 간 연합체를 결성해 이민국장이 도시를 떠나는 시민을 금지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주는 이민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인 것이 명백한 예다. 비록 수정안이 마침내 통과되었지만, 전선은 홍콩 반(反)권위주의 운동의 연합화의 회복탄력성을 입증하고 있다(Lau, 2021).

홍콩에서의 운동 회복탄력성의 마지막 예는 법적 지원 네트워크의 확대에 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1만 명 이상의 시위대가 체

포됐다. 이들 중 최소 4분의 1은 법정 재판이 완료되었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피고인들 중 700명 이상이 폭동 혐의로 기소돼 최장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재판은 현재 2023년까지 예정되어 있다. 대규모 기소와 강도 높은 형사재판에 대응해 많은 시민 사회단체와 개별 시민들이 모여 교도소에 수감된 시위자들을 위해 펜팔친구를 모집하고,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재판과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출판하며, 연대와 기록을 목적으로 한 재판 출석, 수감 가능성에 대비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런 노력들은 감옥의 벽을 사이에 둔 시위대와 시민 사이의 연대감과 신뢰를 쌓는 역할을 하고, 거리 시위를 할 수 없을 때 시위 지지자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 몇 년간 시위와 관련된 재판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공개되는 한, 법적 지원은 반권위주의 운동의 사기 및 집합적 단체(agency)를 유지하기 위한 주요한 정치 참여 형태가 될 것이다.

5. 결론: 교훈과 전망

이 글은 홍콩의 반권위주의 운동을 유리한 상황이든 불리한 상황 이든 간에 활기차고 탄력 있게 유지시켜 준 여러 전략과 전술을 보여준다. 홍콩 내 시위운동이 중단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고, 이 운동이 뛰어난 정치인의 장기 투옥과 민주화 진영에 속하는 정치 단체 해체로 인한 자원 손실과 사기 저하로 고통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홍콩의 발전은 또한 시민 사회와 민주화 운동을 지원할 뿐 아니라 점증하는 국가의 정치적 억압에 저항하는 시민의 정치적 기구를 개방했다. 사실, 새로운 국가안전법에 의한 정치적 탄압 이후에도 여전히 긍정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송환법 반대 운동의 유산 및 기록을 아카이브

화하는 것은 정부의 저항 역사 삭제에 맞서 이 운동의 기억 및 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활동가, 지식인, 일반 시민들을 위한 보다 더 핵심적이고 실천적인 것이 된다. 많은 홍콩인들이 그들의 새 터전을 위해 도시를 떠났고, 거침없는 활동가들은 해외에서 그들의 지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곧 전 세계적으로 홍콩인 디스아포라 활동이 출현할 것 같다.

전면적인 탄압이 운동을 종식 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이는 홍콩 시위운동, 그리고 홍콩 국민들에 대한 연대감과 회복의 시험대들 중 하나일 뿐이다. 중국 본토에서처럼 많은 역사적 사례에서 발견되듯이, 야권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민주화 단체를 해산시키는 것은 지역 시위를 무력화하고 해산시킬 수 있다. 그러나 행동을 주도하는 인물들을 기소하고 수감하는 것은, 1980년대 폴란드와 대만, 한국에서 일어났던 바와 같이, 그 운동을 지속시키기 위한 시민 사회의 연대를 강화하기 때문에 그 운동에 대한 공공사회적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존재 했던 것이다. 나는 홍콩의 반권위주의 운동이 후자의 길을 따를 것이고, 우리가 억압적인 어둠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터전을 결국은 해방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Solidarity and Resilience of Hong Kong's Anti-authoritarian Movement: Lessons and Prospects

Yan-ho Lai ¹⁾

(Conference paper for “After 5.18: social movements and political thoughts”)

(draft only, do not cite)

Introduction

From June 2019 onwards, a series of rallies against a proposal to permit extraditions to mainland China grew into a revival of anti-authoritarian movement in Hong Kong and challenges to Beijing's control over the city. This short article explains the resistance of pro-democracy as well as anti-authoritarian Hong Kong citizens in face of the escalating repression of the sovereign state, China by answering two questions. First, why solidarity of the anti-authoritarian movement was built in 2019? Second, how does the movement remain resilient up to

1) Eric Lai is the Hong Kong Law Fellow at Center for Asian Law in Georgetown Law. He is also a PhD Candidate in Law at SOAS University of London. He was a Convenor of the Civil Human Rights Front, as well as a founding member of the Hong Kong Election Observation Project. His research studies law and politics as well as law and social movement in Hong Kong and China.

the present time?²⁾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leader-full character of the anti-extradition bill movement in 2019 played a pivotal role in building solidarity of the anti-authoritarian movement. The adjective “leader-full” was created by journalists and activists who interpreted protests as being full of leaders who deliberate strategies, organize actions, and mobilize themselves without traditional forms of top-down leadership that is conventionally practiced in social movement industry (Hui, 2019; MobLab Team, 2019). The grave threats to liberty and the rule of law, which are cherished in Hong Kong, amid the absence of stable and legitimate pro-democracy movement leaders have laid foundation of the emergence of leaderless protests, bringing a leader-full movement alive. The unity of protestors was built by popular movement leaders and anonymous activists. The unity was sustained by a multitude of creative strategies and tactics in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life of the city. The decentralized leadership and resistance have contributed to movement resilience as well, when protestors and well-known leaders were cracked down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2020. Protest supporters continued to sustain the legacy of the 2019 movement in ingenious ways, ranging from economic boycotts and boycotts, unionization and judicial assistance. Before going into detail, the context of Hong Kong’s anti-authoritarian movement is explained in the following section.

2) Some ideas and observations in this article draw on my recent work: “Solidarity and implications of a leaderless movement in Hong Kong: its strengths and limitations”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53 (4), 41-67 (co-authored with Ming Sing).

Building Solidarity: From Disunity to Unity

Hong Kong's democratization movement commenced in 1980s, after China and Britain, which was the suzerain of Hong Kong since 1842, signed an UN-registered treaty for the transfer of Hong Kong's sovereignty to China in 1997. The early democratization movement had two characters: (1) to promote more liberal democratic reform of the electoral system introduced by the British colonial administration and (2) to resist the Communist autocratic rule by full democracy that could preserve the autonomy in Hong Kong. The second character gained a lot of sympathy from Hong Kong citizens after Beijing's crackdown of the Tiananmen student movement on 4th June 1989.

Although a Bill of Rights that protects rights and freedoms of Hong Kong citizen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was enacted in Hong Kong, and the Basic Law, which serves as a "mini-constitution" under the new sovereign, promised a full universal suffrage will be achieved in future elections for the Chief Executive and the Legislative Council, Beijing suppressed any attempt to make Hong Kong enjoying full democracy and has tightened its control of Hong Kong by various ways. As early as 2003, the puppet government of Hong Kong introduced a draconian national security law, but it was withdrawn after a mass protest featuring more than half a million citizens of Hong Kong denouncing the bill and calling for greater democratization in the city. Then, Beijing heightened its strategy of encroachment by political suppression and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Hong Kong and China. The course of economic globalization and neo-liberalization favored the Chinese capital, both from the state and the private business, to flow to Hong

Kong's property market, stock market and different industries that provide daily necessity to the local people, creating a strong economic dependence of Hong Kong upon China.

When Xi Jinping came to power in 2012, the confrontations between China and Hong Kong escalated. Xi toughened his governing policy towards Hong Kong by suppressing not only democratization, but also the city's freedom and judicial autonomy. The Beijing's decision to set up a filtering mechanism to screen candidates running for future Chief Executive elections by popular vote and thus led to the well-known Umbrella Movement in 2014 was evident of Xi's assertion to prevent full autonomy of Hong Kong.

The state's violations of civil liberties in Hong Kong did not engender a strong unified alliance from civil society to resist the expanding political repression in the beginning. Rather,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Hong Kong had suffered from series of divisions and internal frictions before the anti-extradition bill movement in 2019. For many years different camps of the pro-democracy forces blamed each other for the stalemate of democratization in Hong Kong. The moderate pro-democracy parties and labor unions were criticized as repeatedly making compromises to Beijing on democratic reforms and as reluctant to endorse movement strategies and tactics of the militant protestors, who claimed their ways were more effective than conventional peaceful demonstrations. Moreover, during the Umbrella Movement, student leaders were accused by radical occupiers of dominating the leadership in the occupied sites, and failing to escalate actions to pressurize the government. Last but not the least, the divisions between moderate and radical camp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lso lies in the issue of sovereignty. While traditional

pro-democracy forces promote democracy without challenging the legitimacy of the Chinese sovereignty, localists have been calling for the restoration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by the people, the building of civic nationalism in Hong Kong, and even some of them demanded Hong Kong independence from China.

Although no evidence demonstrates a strong support for making Hong Kong an independent polity among the public, mutual recriminations between the moderate pro-democracy and radical localist camps led to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to a “dead end”, and were made use by the authoritarian state to expand political repression against activists and encroachment of civil society in Hong Kong. During the five years after the Umbrella Movement, at least 9 election candidates were disqualified from running for the Legislative Council elections because of their political advocacy for self-determination or Hong Kong independence. The pro-independence Hong Kong National Party was disbanded by the government on the ground of causing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a foreign journalist who hosted a talk with the leader of the disbanded party was also expelled. 16 activists, including three student leaders in the Umbrella Movement, were sentenced of provision of social service at first but were later on put to jail, due to the prosecution’s appeal for sentence review. Nine activists of the Umbrella Movement were also sentenced to immediate or suspended jail for their acts of civil disobedience. Overall, political repression was prominent as the government’s retribution to the globally known pro-democracy movement in 2014. However, the testimonies and sentencing of intellectual activists, leaders from student unions and political parties, former lawmakers and a Christian pastor in the Umbrella Movement had moved many pro-democracy citizens to en-

gage in the anti-extradition bill protests in 2019, showing support and solidarity with those in jail.

The anti-extradition bill protest movement sparked off in 2019, few months after the government proposed a bill that permits the transfer of Hong Kong residents to mainland China to face criminal trials upon the request of the sovereign state. The proposal empowers the executive branch to accept the request of fugitive transfers from China without any check by the legislature, engendering pressures on judges and the due process of reviewing such requests at court. Seeing the bill as a grave threat to personal freedoms and the city's rule of law, movement disunity was replaced by unity of different pro-democracy camps to oppose the bill, which would help Beijing to suppress all opposition figures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by sending them to be tried within the Chinese criminal justice system. Both moderate and traditional pro-democracy parties alongside coalitions as well as localist groups mobilized supporters and the public to oppose the bill. Before the one million people's march against the extradition bill on 9 June 2019, some active users of an online forum "LIHKG" formed a team to propaganda against the extradition amendments and to call for joining demonstration to pressurize the government. Hundreds and thousands of citizens also started online signature campaign, circulating anti-extradition bill statements among their peers in schools, workplace, and churches, generating a strong opposition of more than 270,000 signatures from at least 376 online statements (CitizenNews, 2019). These actions indicated the growing solidarity of civil society in resisting the bill with an unified voice.

Solidarity in the anti-extradition bill movement was not only attributed to the common acknowledge of threats from the

government proposal and to the affective bonding with jailed activists, but also to the common experiences of sufferings at the beginning of the movement, that were the largely perceived police brutality in protest policing and the self-sacrifice by young protestors. Evidence of police's excessive use of disproportionate force such as rubber rounds, expired teargas canisters, water cannon and even live ammunition in public order policing have been widely reported and documented by the press and international NGOs. As found in on-site surveys conducted by local scholars, public discontent with the police's treatment of protestors was the top reason of supporting the anti-extradition bill movement since July 2019 (Lee et. al. 2019). Worse still, several young protestors committed suicide at the beginning of the movement, leaving notes that re-stated their demands for withdrawing the bill and realizing full democracy in the city. Last but not the least, when hundreds of protestors stormed in the Legislative Council Complex on 1 July 2019, one of them removed his mask that made his identity known to the public, urging protestors to remain in the building and called for citizens to come to protect them. Otherwise, as he appealed, the occupy would end with a long-term failure of the movement.

Although occupiers decided to retreat from the building at the end, the courageous self-sacrifice of protestors with blood and sweat had moved more and more citizens to endorse and participate in the movement late on. Different camps in the movement realized the need to achieve greater unity as well as the value of decentralizing the movement in order to mobilize as many people as they could. The changes in protest philosophy and tactics led to a leader-full movement that built solidarity and resilience of the anti-authoritarian

movement in Hong Kong, and is examined in the next section.

From Leaderless Protests to A Leader-full Movement

The anti-extradition bill movement was leaderless but leader-full. As shown in an on-site survey, only 4.5% of the responded protesters claimed that they were mobilized by organizations, whereas 15.1% said they engaged in the movement on their own. The survey also revealed that 75.9% of respondents treated online forums as one of the most popular channels for information exchange regarding the protests (Lee et al., 2019). While radical protestors demonstrated strong commitment to militant and disruptive protest strategies to pressurize the government, peaceful and moderate protestors focused on widening scope of mobilizations as well as developing protest tactics for solidarity actions. In other words, protestors were not just following commands from any outstanding activist leaders or organizations, but leading the movement themselves. This section provides five examples to explain such leader-fullness in this movement.

Firstly, traditional pro-democracy forces and newly emerged platforms played pivotal roles in mobilizing citizens together, eliminating a top-down, organizational-centric form of mobilization. The Civil Human Rights Front (CHRF), as a civil society platform consisted of more than 40 member organisations, including pro-democracy parties, labour unions, Church communities and human rights advocacy organisations, served as the major rally mobilizer in the traditional pro-democracy camp. Being a veteran and popular protest organiser since 2002, CHRF organized nine mass

demonstrations against the extradition bill and demanding for full democracy in general between 2019 and 2020. Four of the rallies were featured by more than a million participants, as estimated by the organizers. CHRF played an active role not only by organising mass demonstrations that caught global media attention, but also by mobilizing resources to sustain the movement. It coordinated with a group of *pro bono* lawyers and the 612 Humanitarian Fund, which was a crowdfunding platform trusted by former lawmakers and a Catholic Cardinal, to provide legal assistance for arrested protestors.

Apart from tradition form of protest participation, many anonymous protestors made use of social media platforms and communication tools such as Telegram to recruit members to decide and coordinate protest actions at the frontline. A multitude of Telegram groups and channels were created, harnessing a diversity of support, ranging from organizing protests to updating real-time information at protest sites and exchanging contacts to arrange exit plans. A division of labor was clear: traditional pro-democracy forces concentrated their efforts on mobilizing the mainstream peaceful citizens to engage in protests, whereas radical and militant protestors could organize protest actions through virtual platforms by themselves. With the movement slogans such as “be water” and “no snitch, no split” becoming the imperatives among protestors, different camps ceased to blame each other over protest ideology and tactics. Rather, they stressed more on the importance of fluidity and solidarity of protest actions (Lee 2020).

Secondly, cross-sectoral mobilizations were carried out to demonstrate citywide support for the movement to local and international media. As aforementioned, cross-sectoral signature

campaign was a major driving force of the outbreak of the anti-extradition bill movement in June 2019. Later on, sectoral mobilisation became more comprehensive. Groups of individuals created Facebook pages and declared their endorsement for the movement with their affective or professional identity, such as “Hong Kong mothers”, protestant clergy, medical doctors and civil servants. They got media attention not as they performed as different pillars of consolidating the solidarity and continuity of the movement. These groups did not claim themselves leaders of the movement but acted as organizers to expand the base of support for the movement. Cross-sectoral mobilizations not only demonstrated solid public support for the protests. It could lower the cost of protest participation when citizens realized that their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could contribute to the movement meaningfully. Their substantive provisions of resources and assistance to protestors on legal, medical, psychological, spiritual and familial needs enriched the diversity of protest participation as well as enhanced movement solidarity as a whole.

Thirdly, learned from local and global history of resistance, protestors developed three protest tactics to show the power of arts and of solidarity, keeping the movement vibrant and resilient. The arts, whatever in visual, motion or musical forms, is highly connected with social movements as many protestors and professional artists have produced artworks and artistic activities that engender political power against the establishment in social movement (Pang 2020). In the anti-extradition bill movement, a multitude of “Lennon Walls” was setup across neighborhoods and popular sites of the city. Lennon Wall was an iconic site that allows people to write political messages to

express their views and sentiments toward the Umbrella Movement in the occupied zones. It was revived in the 2019 protests and widespread in the city, providing a political space to display artistic pro-movement propaganda as well as to attract passers-by to write sticky notes, showing solidarity with and support for frontline protestors.

The forming of human chains named as “the Hong Kong Way” and the chanting of a newly-composed protest anthem of “Glory to Hong Kong” were other instances of artistic protestors for solidarity. They were inspired by the “Baltic Way” and the “Singing Revolution” of the Baltic states in late 1980s. Unlike major demonstrations in the anti-extradition bill movement, “the Hong Kong Way” and “Glory to Hong Kong” were initiated by unknown activists in online forum. Coordinated through Telegram groups and promoted through media publicity, the first human chain action was carried out in three major hubs of Hong Kong and the landmark mountain of Lion Rock in August 2019. It was estimated that more than 45,000 participants built a 45-kilometer-long human chain in one night. For the chanting of the new protest anthem, it was recorded and uploaded to YouTube by anonymous citizens. It had attracted wide audience and appreciation as the lyrics drew on the protestors’ experiences and sentiments, enhancing their commitment to the struggle for democracy and freedom at all costs. People commenced to play and chant the anthem in street protests and other avenues such as shopping malls, football matches and even churches. The human chains and the chanting actions were widely copied by ordinary students and residents in neighborhoods, who initiated numerous protest actions inside or outside high school campuses and residential estates

respectively (Lai and Sing 2020). A leader-full movement was achieved, laying foundations for strengthening movement resilience in face of the toughened retribution by the state.

Strengthening Movement Resilience in Economic and Judicial Realms

In June 2020, Beijing decided to enact a national security law that bypassed the local legislature of Hong Kong, for the sake of suppressing the anti-authoritarian movement. The new law fundamentally violated protection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prescribed in the Basic Law of Hong Kong alongside the ICCPR, and weakened the powers of the local independent judiciary by a number of legal measures. By now, more than a hundred political activists were arrested under charges of inciting session, subversion, acts of terrorist activities and of colluding with foreign forces. Most of them were denied bail and remanded at present. Despite the crackdown of political activists and the disappearance of direct actions and street mobilizations, traces of the anti-extradition bill movement can still be found in citizenry life. Three instances can prove the anti-authoritarian movement in Hong Kong remain resilient under such diminishing civic space.

First and foremost, political consumerism has served as a major strategy for citizens to continue their support for the anti-authoritarian movement. Political consumerism aims at promoting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s via economic consumption, such as buy-cotting fair trade products and boycotting goods from sweat factory. In the

case of Hong Kong, political consumerism has been practiced by protestors and pro-democracy citizens by distinguishing pro- and anti-government camps in the economy. Protestors labeled restaurants and retail shops as within the “yellow economic circle” if they had joined strikes against the extradition bill, publicly endorsed the movement, or displayed protest propaganda. At the same time, joint enterprise, chain stores and restaurants that are owned by Chinese capitalists and pro-government businessmen were identified as part of the “blue economic circle”. Protest supporters also innovated smartphone applications to navigate members of the yellow economic circle, in order to strengthen the ties between protestors, pro-movement stores and pro-democracy consumers. Moreover, the yellow economic circle evolved to be more sophisticated when pro-democracy citizens and merchants set up networks to recruit protestors who were dismissed due to their current charges, as well as to expand political consumerism in other service industries, such as grocery delivery. After the passage of the new national security law, many shops and restaurants in the yellow economic circle decided to remove posters that promoted the movement. However, the track record of those “yellow shops” and “yellow restaurants” continued to attract pro-democracy supporters. Furthermore, after law enforcement agencies harassed or arrested owners or employees of the yellow shops, many citizens went to buy goods in those branches as ways of showing solidarity with movement allies and of performing subtle, hidden resistance to the state’s crackdown of protests (Hong Kong Free Press 2021).

Another evidence of the resilience of the anti-authoritarian movement is the sustained waves of new labor union front, which was

sparked off in late 2019. During the course of the anti-extradition bill movement, many white collar workers realized that forming labor unions would be effective to organize peers to sustain the movement on one hand, and could generate pressure to the pro-government camp in competing seats of lawmakers dedicated to union representatives. According to “Hong Kong on Strike”, a major civil society platform that was established during the 2019 protests, at least 50 newly-formed labor unions and traditional pro-democracy unions formed a united front to prepare for a general strike that demands for full democracy in Hong Kong (Hong Kong on Strike, 2019). In 2020, more than 450 new unions were registered officially. One of the major goals of new unions was to call for strikes against unpopular governance, such as the Hospital Authority Employees Alliance’s strike that pressurized the government to close the border at the outbreak of the COVID pandemic. Despite the fact that some new labor unions decided to disband due to the threat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many remained operation and continue to recruit members and to distribute materials critical of government policies alongside political repression. An obvious example was the formation of a coalition among labor unions in April 2021, campaigning against a proposed immigration law amendment that would give greater power of the Director of Immigration to bar citizens leaving the city. Although the amendment was finally passed, the front proves the resilience of unionization of the anti-authoritarian movement in Hong Kong (Lau 2021).

The last example of movement resilience in Hong Kong lies in the widening network of judicial assistance. As of this writing, more than 10,000 protestors were arrested. At least a quarter of them completed

or wait for court trials, and more than 700 of the defendants were charged with rioting, which can be sentenced to jail for up to ten years. The latest court trials are scheduled in 2023 so far. In response to the mass prosecution and intensive criminal trials, man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citizens gather to provide support for the defendants in numerous ways, ranging from providing briefings as preparations of possible imprisonments, attending court trials for solidarity and documentation purposes, publishing stories of trials and sentenced defendants for gaining public attention, to recruiting pen friends for protestors in jail. These efforts serve as building solidarity and trust between protestors and citizens between the wall of prison, and as unifying protest supporters when street protests are not possible to be held. As protest-related trials would last in the coming years, as long as trials remain public, judicial assistance would continue to be a major form of political participation for sustaining the morale and collective agency of the anti-authoritarian movement.

Conclusion: Lessons and Prospects

This article reveals a number of strategies and tactics that kept the Hong Kong's anti-authoritarian movement vibrant and resilient in both favorable and difficult circumstances. It is understandable that protest movement in Hong Kong may enter a stage of abeyance, and the movement would suffer from the loss of resources and a decline in morale due to the long imprisonment of outstanding political figures and the disbanding of political groups from the pro-democracy camp. Even so, the post-2020 development in Hong Kong has also

unfolded the political agency of citizens in supporting civil society and pro-democracy movement as well as resisting the escalating political repression by the state. In fact, positive elements can still be found after the political crackdown by the new national security law. Archiving the legacy and documentary records of the anti-extradition bill movement becomes more essential and practical for activists, intellectuals and ordinary citizens to protect the memories and legacies of the anti-extradition bill movement from the government's wiping of the history of resistance. Many Hongkongers departed the city to set up their new homes, and outspoken activists continue their advocacy work overseas. It is likely that Hong Kong diasporic activism would emerge across the globe soon.

The total crackdown would not put the movement to an end. It is just one of the trials of the solidarity and resilience to the Hong Kong protest movement, and to the people of Hong Kong. As found in many historical instances, say in the mainland China, putting opposition leaders in jail or disbanding pro-democracy organizations could demobilize and dissolve local protests. However, there were also cases showing that, prosecuting and imprisoning leading figures in activism could engender greater sympathy to the movement by the public, strengthening solidarity in civil society to sustain the movement, like what had happened in Poland, Taiwan and Korea in 1980s. I believe Hong Kong's anti-authoritarian movement would follow the latter path, and we would eventually set our home free from the repressive darkness.

References

- CitizenNews, (2019). Compilation of Anti-extradition Petitions. *Citizen News* [online]. Updated 9 June 2019 14:58. [Viewed 11 May 2021]. Available from: <https://www.hkcnews.com/FOO-petitions/#/>
- Hong Kong Free Press, (2021) Queuing, blank placards and shopping: how Hongkongers innovated acts of resistance during security law clampdown. [online]. Updated 15 April 2021 17:00. [Viewed 11 May 2021]. Available from: <https://hongkongfp.com/2021/04/15/queuing-blank-placards-and-shopping-how-hongkongers-innovated-acts-of-resistance-during-security-law-clampdown/>
- Hong Kong on Strike, (2019) List of Labor Unions. [online]. [Viewed 11 May 2021]. Available from: <https://hkonstrike.com/unions>
- Hui, Mary, (2019). What the Hong Kong protests can teach the world about enduring social movements. *Quartz* [online]. 19 November. [Viewed 11 May 2021]. Available from: <https://qz.com/1695788/the-hong-kong-protests-epitomize-a-resilient-social-movement/>
- Lai, Yan-ho and Sing, Ming, (2020) Solidarity and Implications of a Leaderless Movement in Hong Kong: Its Strengths and Limitations.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53 (4), 41-67.
- Lau, Chris, (2021) Hong Kong labour unions lead campaign against amendments to immigration bill. *South China Morning Post* [online]. Updated 1 May 2021 22:00. [Viewed 11 May 2021]. Available from: <https://www.scmp.com/news/hong-kong/politics/article/3131909/hong-kong-labour-unions-lead-campaign-against-amendments>
- Lee, Francis Lap-fung, (2020b) Solidarity in the Anti-Extradition Bill movement in Hong Kong. *Critical Asian Studies*. 52 (1), 1 - 15.
- Lee, Francis Lap-fung, Yuen, Samson, Tang, Gary. & Cheng, Edmund

- Wai, (2019) Hong Kong's summer of uprising. *China Review*. 19 (4), 1 - 32.
- MobLab Team, (2014). Top stories of 2019. *MobilisationLab* [online]. 19 December. [Viewed 11 May 2021]. Available from: <https://mobilisationlab.org/stories/top-stories-of-2019/>
- Pang, Lai Kwan, (2020) *The appearing demos: Hong Kong during and after the Umbrella Movement*.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홍콩 항쟁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홍명교
(플랫폼c)

2019년 12월 초, 홍콩 항쟁이 한창이던 시기 한국의 활동가들은 홍콩 시민들과의 국제연대를 위해 방문했었다. 당시 에릭 라이로부터 더 할 수 없는 환대를 받았고, 많은 활동가들을 소개받았다. 어느 때보다 험난한 시기였을 텐데 에릭과 홍콩 시민사회는 한국에서 온 일곱 명의 활동가들을 크게 환대해주었다. 당시 홍콩 항쟁은 대단히 개방적이고,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포괄했다. 또, 청년 활동가들이 운동의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표상이 되어 있었다. 이런 점들은 분명 한국 사회운동보다 두드러지는 특징이었고, 한국이 배워야 하는 점이었다. 그러니까 홍콩은 당시 한국 언론이 오독했던 것과 달리, '80년 광주'를 뒤늦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먼저 겪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2019-2020 홍콩 범죄인 송환조례 반대운동(返送中運動)의 역동성과 회복탄력성은 분명 에릭 라이를 비롯한 많은 민주파 활동가들의 헌신과 열의, (2014년 우산운동에 대한) 자기반성(反思)을 바탕으로 한다. 객관적으로 매우 험난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홍콩 항쟁이 장기적으로 지속됐던 것은 홍콩의 당대 사회운동이 획득한 장점들, 나아가 활동가들의 헌신을 밑거름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항쟁 촉발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난 지금, 바깥에서 본 홍콩 정세는 매우 암울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발표자는 현재 홍콩 범민주파가 지닌 연대와 회복탄력성이 이 침체를 극복해 나가려 시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노력이 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나 역시 이와 같은 낙관이 아예 근거 없다고 보지 않으며, 이 굳건한 낙관을 예비하는 숨은 노력들을 지지한다. 그럼에도 이런 회복탄력성을 넘어 홍콩 항쟁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망을 구축하고, 다시 펼쳐질 보다 큰 운동에서 승리하려면 몇 가지 고민을 진척시키려는 진지한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1. 지도자 없는 운동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발표자는 지도자 없는 운동(leaderless movement)의 전술적인 함정에 대해 자신의 논문¹⁾에서 탁월하게 지적하고 있다.²⁾ 그에 따르면 홍콩의 지도자 없는 운동은, ① 비대한 운동(juggernaut)에 대한 연대 흐름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용무파(勇武派)의 폭투 전술을 지나치게 허용했으며, ② 전술의 효과와 부적절한 정치적 소통이 전술적 함정과 의도하지 않은 비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개별적 소진 및 운동이 파쇄될 확률을 높이고, ③ 교착상태나 타협하지 않는 전면적 대결로 변질될 가능성을 높였다.³⁾

1) Lai, Yan-ho and Sing, Ming (2020) 'Solidarity and Implications of a Leaderless Movement in Hong Kong: Its Strengths and Limitations.'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53 (4). pp. 41-67.

2) 해당 논문은 “폭력투쟁의 추가적인 확산을 불러올 위험을 초래함으로써 운동 승리에 필요한 중추적 역할을 할 대중의 참여를 소외시켰다. 만연한 반달리즘, 경찰만이 아니라 반대파에 대한 공격, 화염병 시위 등을 낳고, 이는 대중의 지지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3) 이와 같은 홍콩의 실패는 한국에서의 대중운동(특히 2009년 광우병 촛불과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 경험을 상기시킨다. 2009년 일군의 군중들이 ‘깃발을 내리라며’ 조직운동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면, 2016년에는 ‘깃발’들이 백화점처럼 전시됐다. 하지만 두 운동 모두 실질적으로 ‘리더 없는 운동’으

2020년 1월 대중 앞에 소개되었다가 당국으로부터 상영 불가 등의 탄압을 받은 다큐멘터리 《理大圍城 (Inside the Red Brick Wall)》은 그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19년 11월 이공대학 농성/포위 당시 캠퍼스 안에 있던 청년들은 경찰의 전방위적 포위와 폭력(약 열흘에 걸친 농성 기간 1,377명 체포)으로 상황이 악화되자 캠퍼스를 떠나 투항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사수할 것인지를 두고 논쟁을 벌인다. 하지만 누구도 자신들의 투쟁의 의의나 이후의 방향에 대해 잘 설명해내지 못한다.

아마도 이런 혼돈은 리더십의 부재가 야기한 결과일 것이다. 그렇다면 홍콩의 반송중 운동에서 확인된 ‘지도자 없는 운동’의 한계가 발표자가 규명한 여러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회복탄력성을 어떻게 저해하지 않는가? ‘지도자 없는 운동’의 한계와 홍콩 국가안전법(香港國安法)의 억압이라는 장벽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을 어떻게 재구축해야 할까?

2. 본토파와 민주파의 전망은 공존할 수 있는가

홍콩 항쟁에 참여한 일부는 이 운동이 드러낸 몇 가지 한계들을 지적한 바 있다. 몇 가지 알려진 사례들이 있다. ① 2019년 7월 6일, 톤문공원의 일명 ‘다마(太媽)’⁴⁾의 공원 출입을 금지하라는 군중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 도중 사람들은 공중화장실을 가로막고, 여성혐오적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인종주의적 폭력을 행사했다. 시위가 끝나고 몇 시간 뒤, 톤문 구의회는 논란이 된 ‘자율오락구역’을 폐쇄했다.⁵⁾ ② 켈링 캐터링(光榮冰室) 음식점은 대륙인 고객의 출입을

로서의 특질을 가졌던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4) 공원에서 춤추는 대륙 출신 중년여성에 대한 멸칭.

5) 출처: JN Chien, 「Toward a radical Hong Kong imagination : Reflections on

거부해 인종주의 논란이 있었다.⁶⁾

본토파(本土派 ; nativist) 중 일부는 홍콩의 미래에 대해 ‘지역민족주의적(regional nationalism) 자유민주주의’ 전망을 그리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들은 영국 식민지 시기에서부터 잔존해온 구조적 모순은 애써 언급하지 않기도 한다. 그렇다면 홍콩 내 40만 명의 동남아 출신 가사노동자, 대륙 출신의 일부 농민공들은 공존의 대상인지, 여전히 배제의 대상이자 도시의 타자로 남아야 하는지 질문이 남는다. 또, 홍콩의 불평등 문제나 노동 배제 역시 마찬가지다. 비건제(非建制派) 또는 범민(凡民主派) 내의 상이한 정치사회적 전망은 공존할 수 있을까? 항쟁 과정에서 드러난 대륙 출신 인민 일반에 대한 혐오 정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3. 사회 · 경제적 모순에 대한 전망

홍콩 항쟁은 70-80년대 국제 금융자본에 의해 형성 및 발전한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의 중장기적 전망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항쟁 과정에서 내내 2003년 이후 심화된 양극화 현상과 2010년대 이후의 경기 침체의 불만이 드러났다. 전투가 첨예하게 벌어진 현장에는 ‘빈곤’과 ‘뭉(stake)’에 대한 낙서가 남아있었다. 이처럼 빈곤이나 실업, 홍콩의 만연한 장시간노동 등에 분노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지만, 이런 의제들은 좀처럼 의제화되지 않았다. 경제·사회적 모순을 극복할

nativism in the Tuen Mun Park protests」

<https://lausan.hk/2019/towards-a-radical-hong-kong-imagination/>

6) 출처: 蹲點, 【反送中一週年專題】香港左翼去咗邊?

<https://squatting2047.com/%E3%80%90%E5%8F%8D%E9%80%81%E4%B8%AD%E4%B8%80%E9%80%B1%E5%B9%B4%E5%B0%88%E9%A1%8C%E3%80%91%E9%A6%99%E6%B8%AF%E5%B7%A6%E7%BF%BC%E5%8E%BB%E5%92%97%E9%82%8A%EF%BC%9F/>

전망이 포함되지 않은 한계 속에서 중국공산당과 시진핑의 권위주의 통치에 맞선 ‘민주주의’라는 비전만으로 충분할까? 경제·사회구조의 모순을 겨누는 좀 더 급진적인 의제는 빅테이블에 포함될 수 없을까?

4. 홍콩-대륙의 인민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홍콩은 언제나 대륙 운동과의 접점을 만들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장해왔다. 광둥성 선전(深圳)의 쓰리 장난감공장(致麗玩具廠)이 불에 타 89명의 여성 농민공이 목숨을 잃었을 때에도 홍콩 시민사회는 전심전력을 다 해 이 문제에 응했고, 대륙의 사회운동과 긴밀히 관계 맺기 시작했다. 오늘날 중국 노동문제에 대한 가장 유효하고 동시적인 정보와 분석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노동통신(中國勞工通訊; China Labour Bulletin)은 대륙 활동가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사회와 중국 간 다리 구실을 했다.

1989년 봄 홍콩 시민들이 베이징에서 벌어진 항쟁에 마음을 다해 연대했던 것 역시 기실 홍콩의 민주화(그것이 일국양제의 완벽한 보장이든, 다른 어떤 정치적 비전이든)가 대륙 내 정치 질서의 민주적 진전과 분리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2019년 반송중 운동과 2020년 국가안전법 시행 이후 홍콩의 시민사회는 대륙의 사회운동과 어떻게 접점을 만들 것인가? 그것이 더욱 어려워진 조건 속에서 대륙의 시민사회와 공명하는 중화권 전반의 정치적 비전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어쩌면 무용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전보다 더 중대한 과제가 된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날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적 자본주의체제와 중국식의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체제 모두가 우리의 대안이 아니라고 할 때, 홍콩 항쟁 과정에서 이를 아우르는 비전이 도출되지 못했던 것, 그것이 운동의

헤게모니로 등극되지 못했던 것이 저항 운동 전반의 한계를 결정지은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해 홍콩 시민사회의 응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5. 모두의 과제

2019년 홍콩에서의 저항이 2020년 방콕으로 이어지고, 2021년 미얀마로 이어졌듯, 최근 동아시아 정세는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고, 미중 분쟁의 격전지가 되고 있다. 이는 한국이나 대만 역시 예외가 아니며, 가장 상시적인 대내 갈등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한때 홍콩의 정세가 한국 사회에 제대로 ‘번역’되지 않았다. 가령 한국의 사회운동 진영은 홍콩 항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두고 혼돈에 빠지기도 했다. 이처럼 각국 사회와 대중이 갖는 현 정세에 대한 인식 차는 꽤 크다. 동남아시아와 홍콩에서 이는 ‘밀크티동맹(Milk Tea Alliance)’으로 일정한 연대 정서를 보여주지만, 한국이나 일본에 다다르면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엔 멀다. 더구나 ‘밀크티동맹’은 ‘반중 정서’를 매개로 하기에 대륙 내 인민과의 연대까지 나아가기엔 한계가 있다. 오늘날 국제 정세에 대한 인민의 계급적인 이해를 통일적으로 해설하면서, 동시에 국가와 자본의 폭력에 맞서 국경을 넘은 ‘동맹’을 구축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